

긴급!

9.23 총파업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민주노조파괴, 강제임금삭감 노동계약 분쇄!
가자! 서울로! 서울로!

전 조합원 서울 집결!

9·23 총파업
후퇴를 멈추고
총파업으로

2, 3, 13, 16 면

최근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어떻게 볼 것인가?

10~11 면

정치단체는 노동조합에
참견하면 안 되나?

14~15 면

사회주의자
제러미 코빈의
영국 노동당 대표 당선

6 면

유럽 난민 사태
지배자들의 배신,
노동자들의 연대

6 면

그리스 총선
이전 같지 않은
시리자 지지

8 면

후퇴를 멈추고 총파업으로!

김하영

9월 1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에서 9·23 총파업이 결정됐다. 이 대회를 소집하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추석 전 파업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총궐기,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야합이라는 실제상황이 벌어진 지금, 때를 놓치지 말고 강력한 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합원들도 우리를 믿고 투쟁을 준비하고 결의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시에 현장을 멈추고 서울로 쏟아져 나오시다. 투쟁은 타이밍입니다. 단위사업장 대표자 동지들의 결단이 대반격의 시작입니다.”(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 자료집)

왜 추석 전 돌입이어야 하는가?

한상균 위원장의 지적처럼, 때를 놓치지 않고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으로 여론몰이를 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려 한다. 맘대로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곧 발표할 것이고, 16일 새누리당의 입법 발의에서 보듯이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만 박근혜의 ‘노동개혁’ 속도전에 다소라도 제동을 걸 수 있다.

투쟁의 때를 놓치고 결국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는 것을 방지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기울었다는 생각과 무기력감에 이후 투쟁을 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아직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시”가 아니라는 듯이, 투쟁을 미루자고 한다. 그러나 개악 법안 “국회 상정 시” 또는 “통과 시”처럼 이미 사태가 기운 다음에는 상황을 되돌리기가 더 어렵고, 그걸 뻔히 아는 노동자들이 투지를 발휘하기도 힘들다.

총파업은 노조 지도자들이 원할 때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주머니 칼이 아니다. 조합원과 노동자들이 커다란 분노에 휩싸여 있는 지금이 바로 투쟁



9·23 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

의 적기다.

어떤 사람들은 총파업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가 9월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위험에 대비해 조합원들을 미리 준비시키지 못한 점은 돌아볼 만하다. 그러나 촉박하더라도 철든 한국인의 관심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쏠려 있는 이 뜨거운 시기에 ‘촉박하게’ 총파업에 들어가는 게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하루 이틀 파업만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추석 전 총파업 돌입으로 추석 귀향 여론에 영향을 미쳐야 추석 후 좀 덜 불리한 조건에서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 노동자들이 투지 있고 더 자신 있게 되면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함부로 부리기가 좀 더 조심스러워진다.

공은 국회(논의)로 넘어갔나?

어차피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니 국

회 논의가 본격화할 때(11월 또는 일러야 10월) 싸우자는 주장은 위에서 든 이유들로 부적절하다.

우선, 그런 주장은 법 개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으로 당장 추진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문제에는 속수무책인 입장이다. ‘가이드라인이 제정돼도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어차피 국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정은 보아 넘기자는 것이다.

또, 그런 주장은 국회 논의 대응에 중심을 두면서 투쟁은 압박용어만 부차적으로 사용하려는 구상과 맞닿기 쉽다. 그러나 국회 논의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할 수 없다.

실사 국회 논의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런 기구는 “일방적”이지 않은 모양새를 펼 뿐 경제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양보를 설득하는 구실을 한다.

국회 논의 대응에 중심을 두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공조에 매달리게 되

기 십상이라는 문제점도 있다. 새정연은 결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노동개혁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자며 대기업·정규직 양보를 주장하는 한편, 노동개혁뿐 아니라 재벌개혁도 하자는 식이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그들이 노동자들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써온 꼼수일 뿐이다. 1997~98년 이후에도 재벌의 경제 장악력이 여전히 점점 커지고, 빈곤이 점점 증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재벌개혁’은 실효성이 전혀 없었던 반면 정리해고제·파견제 도입은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올해 공무원연금 개악에서도 새정연은 ‘대타협’의 이름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했다.

이처럼 난점이 거듭 드러난 방식을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에서 되풀이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통상임

금, 근로시간 등 법개악에 맞서려면 새정연에 의존하지 말고 국회 밖 투쟁, 특히 대중 투쟁에 확고한 중심을 뒤야 한다.

총파업을 할 현장 동력이 없나?

즉각 총파업 돌입 호소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연 총파업을 할 현장 동력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기층 분위기는 근래 어느 때보다 괜찮았다. 심지어 한국노총에서도 지난 7월 18년 만에 압도적 지지로 총파업이 가결됐었다(89.8퍼센트의 찬성률). 총파업이 불발된 것은 한국노총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국회 앞 농성과 삭발로 시간을 끌다가 노사정위로 복귀했기 때문이지 현장 조합원들 탓은 아니었다.

민주노총의 기층 분위기로 말하면, 기반도 넓지 않았던 한상균 당시 위원장 후보가 총파업 공약을 내걸고 당선

현대·기아차지부가 총파업 선두에 서야 한다

김우용 금속노조 대의원, 기아차지부 조합원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강행되면, 현대·기아차지부가 아무리 강력해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1998년 정리해고법이 통과된 직후 김대중 정부와 현대차 자본은 현대차에서 1만 명을 해고하겠다고 총공격을 감행했다. 이때 현대차 노조는 36일간의 공장 점거파업으로 정리해고를 최소화했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이후 금속노조 사업장 대부분이 정리해고와 사투를 벌인 기억이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다.

이젠 “저성과자”란 명분으로, 대규모

정리해고가 아니라 야금야금 일반해고가 벌어질 게 자명하다. 법적 소송을 하면, 법원도 자본 편을 들 것이 뻔하지 않은가.

지금도 현대차 그룹은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합법” 파견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규직 전환을 바라는 사내하청 동지들의 열망을 짓밟는 것이다.

이를 막을 다른 방법이 없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강력한 총파업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막아 주지 않는다. 더는 주저할 수 없다.

민주노총의 핵심 대오인 금속노조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9월 23일 총파업

지침을 하달해야 한다. 금속노조 단위사업장에서, 특히 현대·기아차지부 같은 대공장에서 ‘간부 파업’이란 말장난으로 파업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주야 동시 8시간 총파업 지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금속노조 김상구 신임 위원장은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분명히 공약했다. 바로 지금 그 공약대로 총파업 지침을 하달해야 한다. 총파업 조직은 그의 첫 임무가 돼야 한다.

특히 현대·기아차지부가 총파업에 앞장서야 한다. 그럴 때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도 자신감을 갖고 투쟁에 나설 수 있다.

혹여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가 부적절한 잠정합의로 23일 총파업을 비켜 가려해서는 안 된다. 이경훈 집행부는 “우천”을 이유로 9월 17일 조선업종 노조들과 약속한 공동 집회를 취소했다. 당일 모인 조선업 노동자들은 ‘지금 시국에 집회를 취소하느냐’며 정당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금 현대·기아차지부는 정의권이 있다. 이런 기회를 살려야 한다. 하루 파업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파업을 확대·발전시켜 가야 한다. 이렇게 싸워야 일자리 문제로 절망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의 지지와 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작업장에서 파업을 호소하고 있는 기아차 노동자

된 것이 한 징후였다.

4·24 파업 때까지 상승하던 분위기는 이후에는 탄력을 잃고 말았는데, 주로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의 4·24 파업 비난과 이총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가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현장 동력이 문제였던 것은 아니다.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투쟁 패배 후 급속히 총파업 불가론이 확산되고 사회적 대화(국회 논의기구)로 관심이 기울면서, 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 위협에 대비한 투쟁 계획이 공백을 빚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럼에도 지금 현장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현장 조합원들은 스스로 투쟁에 나설 만큼 자신이 있지는 않아도 만일 지도부가 단호하게 파업을 명령하면 따를 태세가 돼 있다는 점을 간파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현재의 노동자 투쟁이 대체로 보아 차질이 빚어지기 일쑤이지만, 그 이유를 제대로 짚어가지, 현장 조합원 뜻을 해서는 안 된다.

상반기 투쟁의 약점을 반복해선 안 된다

여기서 상반기 투쟁을 상세히 돌아보기는 어렵다. (이 신문 150호에 실린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을 참고하시오.) 다만, 반복해서는 결코 안 될 점 두 가지만 언급하려 한다.

첫째, 민주노총은 9·23 총파업 이후 후속 투쟁 계획을 즉시 내놓아야 한다. 4·24 총파업 이후 후속 투쟁 계획이 신속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것은 약점이었다. 하루파업으로는 박근혜의 공세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4·24를 성사시킨 자신감을 발판으로 이후 투쟁을 확대해 가야 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다. 4·24 이후 투쟁 공백이 있었다는 약점이 추석 후에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일회성 집회와 다름없는 ‘총파업’에 그치면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온건파들의 ‘파업 무용론’ 목소리를

키우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둘째, 산하 노조들이 펼치는 투쟁 전선의 균열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 가령 이총재 전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4·24 총파업 전부터 국민대타협기구에 참가하며 공무원연금 개악 수용을 저울질하다가 결국 5월 2일 개악안에 합의해 이후 투쟁 전선에 악영향을 미쳤다.

현재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노사정위 야합이 있는 뒤에도 한국노총 산하 노조들과 함께 ‘노정 실무협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노조가 9·23 총파업으로 힘을 모으는 데 장애가 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지도부가 9월은 어렵고 10월이나 총파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4·24 총파업 당시에도 공공운수노조는 투쟁을 6월로 미뤘는데, 이때도 한국노총 산하 노조들과 함께 기재부·노동부와와 실무협의 테이블에 참가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제대로 맞서려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노정 실무협의를 중단하고 총파업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노총과 계급 대표성

지금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서 각자의 조직 상태만을 앞세우는 것은 편협한 시각일 것이다.

우익이 아니라면 다 인정하듯이,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특히, 노조가 없거나,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한 노동자들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더 쉽게 노출될 것이다.

그간 민주노총 안팎에서는 과연 민주노총이 계급 대표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바로 지금 그 회의적 질문에 답변할 때다.

민주노총은 단지 조합원뿐 아니라 광범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에도 반대해야 한다. 잘 조직된 사업장은 일반해고와 취

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를 단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험에 직면한 다른 노동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는 하나의 계급이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그동안 우경적 노조 지도자들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 핑계를 대며 민주노총의 투쟁성을 잠식해 왔다. 그러나 계급 대표성을 위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을 대변하려면 오히려 투쟁성을 칭찬하고 고무해야 한다.

“범국민적” 투쟁을 말하기에 앞서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잘 조직된 부문으로서 제 위상을 과시해야 한다. 그러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에 회의적 눈길을 보냈던 청년들로부터 마치 2013년 연말에 받았던 것과 같은 광범하고 열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총파업을 한다고 노동개악을 막을 수 있나?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거듭됐던 양보와 후퇴를 멈춰야 한다. 이제 반격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는 매우 단호하고 끈질기게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추진하고 있다. 소나기 피해 보자며 하나의 개악을 다른 개악의 수용으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는 우리의 조건을 지킬 수 없다. 일반해고와 성과연봉제라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우리의 투쟁을 전면 돌아보아야 한다.

총파업에 돌입한다 해서 노동시장 개악을 모두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속도전에 다소라도 제동을 걸면서, 좀 덜 불리한 조건에서 투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처럼 부패 정권의 위기와 맞물리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

미래는 예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노·자간 계급투쟁이 자본주의 하에서 지속되리라는 점은 예정돼 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저항에 나선다면,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3백여 개 노동운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9월 17일 노사정 야합을 규탄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직과 청년들에게 더 나쁜 조건을 강요하는 “노동개혁”

조명지

박근혜가 “노동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거듭 분명해지고 있다. 노사정위 야합 이후, 새누리당이 신속하게 노동 악법들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비정규직 저질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청년에게 더 나쁜 조건을 강요하는 방안으로 가득하다.

정부·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들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한다. 파견법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5백28개 업무의 파견이 추가로 허용된다. 여기에는 55세 이상 노동자와 ‘고소득·전문직’에 파견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포함된다. 이수가 7백40만 명(전체 노동자의 약 40퍼센트)에 이른다. 교사, 간호사 같은 직종들이 ‘고소득·전문직’에 해당한다.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같은 업종으로 자동차·조선 등의 제조 공정에서 기본이다. ‘뿌리기업’은 대체로 중소·영세 사업장이지만, 유성기업이나 한스코퍼레이션 같은 대형 부품사들도 있다. 그간 기업주들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도 파견을 허용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구멍 송송

정몽구 같은 자들이 불법파견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열어 줬다. 그간 현대차 등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나온 것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노무관리(휴가·휴게 관리감독, 교육·훈련 등)에 개입한 것 등이 불법파견의 증거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

런데 새누리당은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며 이런 불법파견의 징표들에 구멍을 송송 냈다. 원청의 직무교육, 고충처리, 안전 관련 사항을 “원청의 배려”라며 불법파견 징표에서 예외로 하자고도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기업 사내하청이 합법 도급으로 인정될 위험이 훨씬 커진다.

박근혜가 확대하겠다는 실업급여 관련 법안도 실제로는 개악이다.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을 올렸지만(퇴직 전 평균임금 50퍼센트→60퍼센트), 급여의 하한액을 낮췄다. 그런데 이 하한액을 받는 사람이 전체 수급자의 63.6퍼센트나 된다. 특히, 청년들의 75퍼센트가 하한액을 받는다. 대다수의 실업급여가 삭감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까다롭게 하려고 한다. 직업 소개나 훈련지시 등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을 정지하거나 삭감하는 조항도 있다. 이것은 독일의 악명 높은 ‘하르츠 개혁’과 유사하다. 즉, 실업자들에게 주는 복지를 삭감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저질 일자리를 강요한다.

일반해고,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장시간 노동 허용과 임금체계 개편 등의 공격도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지 않은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또, 가뜰이나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로 여러 불이익을 받고, 성희롱과 비정규직화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도 더 악화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광범한 미조직·비정규·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강력히 투쟁함으로써 “민중의 호민관” 구실을 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정 실무협의 중단하고 9·23 총파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정원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 이후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을 압박해 마무리를 짓는 동시에 임금 체계와 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전에 와 있다.

그런데도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노정 실무협의의 중단하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9월 17~18일

경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입장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사실 정부가 노정 실무협의를 제정한 목적이 자체가 임금피크제 문제를 따로 떼어냄으로써 노사정위 합의의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었다.

유감스럽게도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이 위험성을 모르지 않았을텐데도 교섭에 응했다. 전체 전선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데 말이다.

분노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합의함으로써 정부 공격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상황에서, 노정 협의를 통해 양보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망한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는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총액인건비 증액, 기존 정년 60세 이상 공공기관 미적용 등 어떠한 요구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지도부가 노정 실무협의에 미련을 두는 사이, 정부는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들에 제도 도입을 강제하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공격을 시작할 공산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끝낼 이 세 가지를 모두 반드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에서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

서 상당 부분 관철됐다. 정부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규모 공공기관 노조들도 단협이 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파업 조직

그러나 임금피크제 공격에 맞서 아직 버티고 있는 사업장들이 적지 않다. 공공운수노조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함께 내걸고 지금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고 해서 투쟁 시기를 10월 말

~11월로 미뤄서는 안 된다.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시행에 대한 불안과 분노는 매우 크다.

임금피크제보다 더 사악한 공격이라는 분위기가 광범하다. 노동자들의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지금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정 교섭을 중단하고, 민주노총의 9·23 파업을 적극 조직하는 데 나서야 한다.

특히 철도·부산지하철처럼 잘 조직된 노조가 적극 나서야 한다. 활동가들은 기층에서 파업 조직에 박차를 가하자.

현대차 비정규직 잠정합의

사측의 손배 공세와 금속노조의 후퇴가 낳은 산물

박설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 정규직지부, 울산 비정규직지회가 9월 14일 ‘2017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2천 명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다’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측은 지난해 8·18 신규채용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김 없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을 취하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고약하게도 이번 합의에는 신규채용에 응하지 않고 개별 소송을 이어가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문구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물론, 이번 합의에는 8·18 합의보다 조금 진전된 내용도 있다.

8·18 합의 때는 사내하청으로 일했던 근로자를 1~4년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그 두 배인 최장 8년까지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격려금으로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노조에 퍼부어진 2백억 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가 철회될 기회가 생겼다.

다만 노동자들의 기대를 부추겼던 소문, 즉 ‘조합원들을 내년 말까지 전원 신규채용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노사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뿐인데 이는 안 지키면 그만이다.

8·18 합의에서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수십여 명이 신규채용에서 배제됐다. 더구나 2010년 이전에 해고된 조합원, 2~3차 하청 조합원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합의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 3천여 명 이상이 신규채용에서 배제됐다. 이에 더해 함께 싸워온 조합원들끼리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은 합의안에 불만을 터뜨렸다. 9월 16일 열린 조합원 보고대회는 조합원들의 항의와 반발 속에 파행으로 끝이 났다.

“격려금 5백만 원 더 받자고 지급껏 싸운 건 아니지 않냐. 8·18 합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조합원조차 ‘전원’ 보장이 안 되는 데, 왜 이런 안을 가져온 건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해고자투쟁위원회가 9월 14일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잠정합의안에 반대해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선고 연기와 손배 압박

이번 합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나왔다. 사측은 지난해 8·18 합의 때와 꼭 마찬가지로 8월 말 예정됐던 선고의 연기를 신청하며 합의를 압박했다.

사측에겐 더 다급한 사정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조립라인이나, 엔진·차체·서브 등 소위 “간접부서”이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엇갈릴 수 있다는 예상 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간접부서, 2~3차 하청까지 포함해 생산직 사내하청 전원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올해 2월엔 대법원이 다시 이를 준용해 아산 사내하청 노동자 7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사측은 비정규직지회가 소송을 포기하도록 비열한 압박을 끈질기게 가했다. 특히 손배가압류를 통한 압박은 숨이 막히는 수준이었다. 2010년 이후 현대차가 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배 청구액은 무려 2백13억 원에 이른다. 더구나 그 대상에는 노조뿐 아니라 조합원 수백 명도 포함됐다.

사측은 8·18 합의 이후, 소송을 포

기하고 신규채용된 노동자들은 손배에서 제외시켜 줬지만, 비열하게도 나머지 대상자들에게 그 청구액을 떠넘겼다. 신규채용이 있을 때마다 남은 노동자들에게는 점점 더 큰 부담이 가해진 것이다.

엮힌 데 댈친 격으로 일부 해고자와 전·현직 간부들이 지회를 탈퇴해 복직하거나 신규채용에 응시하는 일도 잇따랐다. 이들은 지회의 8·18 합의 거부 방침을 비난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남아 있는 조합원들을 또 흔들었다. 그간 투쟁에 앞장섰던 박현제 전 지회장이 사측 관리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이 드러나, 지회는 또 한 차례 커다란 충격을 겪기도 했다.

요컨대, 8·18 합의를 단호히 거부했던 지회 집행부가 사측의 손배가압류 압박과 내부의 혼란 속에서 결국 이번의 잠정합의에 사인하는 데에 이르게 된 듯하다.

이경훈 집행부의 압박과 금속노조의 후퇴

무엇보다 8·18 합의 이후 금속노조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투쟁

의 전망을 어렵게 만들었다.

지난해 울산 비정규직지회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8·18를 거부하며 투쟁을 시작한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은 이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 줬다. 그 해 11월 열린 금속노조 대의원들은 이들이 잘못된 합의에 발목 잡히지 않고 굳건히 투쟁을 지속하기는 바라는 마음을 담아 “8·18 합의 폐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대의원대회 결정을 반복해 8·18 합의를 사실상 인정한다고 결정하고, 전규석 위원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는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이경훈 지부장은 자신이 체결한 합의에 흠집이 생기고 정치적 명분을 잃을까 봐 중집을 압박했다. 전규석 집행부는 이에 치욕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투쟁하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사기를 꺾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이경훈 우파 집행부는 고사하고, 좌파로 분류되는 금속노조 집행

부까지 자신들의 요구와 대의를 부정한다고 여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아쉽게도 일부 정규직 활동가들도 투쟁하는 비정규직을 확실하게 방어하지 못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노동조합 내 분열이 일어나는 안 된다’는 전규석 위원장의 논리에 흔들렸다. 8·18 합의에 비판적이었던 현대차 일부 좌파 활동가들은 끝까지 비정규직지회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길 주저했다.

사측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속노조조차 대의를 지켜주지 못하자, 지회 내부의 내용도 커졌다. 그리고 4월에는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돌아보면, 지난해 법원 판결이 났을 때, 지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합원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설 필요도 있었다.

조합원들의 반발

종합해 보면, 이번 신규채용 합의는 8·18 합의의 고통스런 여파 속에 있다. 사측은 울산 비정규직지회를 고립시키려고 탄압을 퍼부었고, 이경훈 집행부와 금속노조 중집은 8·18 합의를 거부한 지회의 대의를 부정했다. 이 속에서 지회의 조직이 이완되고 투쟁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그럼에도 지난 16일 보고대회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이 보여 줬듯, 만족스럽지 못한 신규채용 기회에 들어가 위해 노동자들끼리 경쟁해야 하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 어려움 속에서도 “2심 판결을 기회 삼아 다시 싸움을 해 볼 수 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제기도 옳다.

비정규직 투사들은 어렵지만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고 다시금 투쟁의 대안을 건설해 가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선 투쟁이 조직되는 상황도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활동가들은 거둬 타협을 압박하는 정규직노조 지도부로부터 독립적으로, 기층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단결해 싸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단한 사회주의자들의 조직도 필요하다.

KG로지스택배 분회

승리하고 당당하게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KG로지스택배 간선기사들이 무더기 해고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해 당당하게 직장으로 돌아왔다. KG그룹은 옐로우택배와 동부택배를 인수, 통합하여 되팔아 이윤을 챙기려 했다. 그러나 회사를 팔 기회를 놓치고 부담을 떠안게 되자, 노동자들에게 운송료 인하를 강요하며 이윤을 만회하려 했다.

화물연대 소속 간선기사들이 이에 항의하며 투쟁에 나섰다. 동료들에게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고, 조합원들이 늘기 시작했다. 회사는 앞에서는 교섭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우리는 즉각 노숙 농성에 돌입해서 62일간 긴 농성을 시작했다. 일부는 경제적 고통 때문에 울분을 삼키며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갔다. 회사한테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아 내면 일부 희생을 감수 하더라도 타협하지는 실용적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회사는 남은 조합원들에게 은밀히 연락해 일하고 싶으면 굴욕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회유했다.

나는 앞장서 싸워 온 동료들과 함께 흔들리는 조합원들을 설득했다. 갖은 회유와 협박에도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자, 결국 회사는 우리 투쟁이 추

석 대목 매출에 차질을 줄까 봐 두려워 양보했다. 조합원들은 모두 직접계약을 하게 됐고, 운송료도 2013년보다 50~80만 원 인상됐다. 합의서에 당당하게 화물연대 KG택배분회를 명시해 노동조합과의 합의임을 분명히 했다.

패널티

택배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독소조항과 패널티를 대폭 줄여 업계 내에서 보기 드문 표준계약서를 받아냈다. 예를 들면, 상하차 작업, 배송품 스캔 등의 책임을 간선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계약기간 중에

합부로 해고할 수 없고, 차 매매 금지 조항도 삭제됐다. 투쟁기간 중 화물연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들의 기사 월급 및 휴차비용까지 모두 받아 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불독 정신으로 비타협적으로 투쟁했기 때문이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끝까지 대의를 놓지 않으려 했다. 회사는 우리를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했지만,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원칙에 입각해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제 조직은 전보다 더 단단해졌다.

회사가 재차 우리를 공격하면, 즉각 더 강력한 투쟁으로 되받아치기 위해 조합원 교육과 조직 확대를 더 강화하려고 한다.

그동안 투쟁 현장을 방문해 지지와 연대를 보내 준 노동자연대 동지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정성을 쏟아 써준 투쟁 지지글들은 정말 큰 힘이 됐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속에서도 항상 뇌리에 동지들이 함께해서 외롭지 않았고 화물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다.

권영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대전지부

KG로지스택배 분회 조합원

국립대 병원 공동 투쟁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박근혜는 더 큰 개악을 요구할 것”

장호중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에 맞서 병원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 병원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1차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 13곳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에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 13개 기관 중 11곳이 국립대 병원이었다. 정부는 특히 퇴직수당 등을 문제 삼았는데, 국립대 병원 노동자들의 퇴직수당은 국립대 병원이 법인화하면서 도입된 제도다. 노동자들이 더는 공무원이 아니게 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같은 노후대책이 사라졌고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를 ‘특혜’라며 없애라고 지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하향평준화 논리를 들이대며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했다.

국립대 병원 노동자들이 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자 각 병원 측은 정부 눈치를 보면서 퇴직수당을 없애는 대신 이를 임금으로 보전하겠다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려 했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진이 정부의 압력과 노동자들의 저항 사이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방식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런 ‘꼼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만족할 만한 재정 절감 효과가 나지 않으면 다시 ‘정상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는커녕 병원 노동자만 공격하는 박근혜에 맞서다 9월 11일 국립대 병원 노조 공동결의대회.

화’ 미이행 기관으로 지정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어느 한쪽을 양보하면 다른 쪽에서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주장이 설 자리가 없어졌음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 하나다.

공공의료 서비스

박근혜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립대 병원 등 공공기관 전체에 임금피크제 실시를 강행하려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공동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국립대 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지극히 미미하고,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이직률을 낮추고, 근속년수

를 높이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국립대 병원 노동자들의 정년 퇴직 비율은 매우 낮다. 게다가 메르스 사태가 보여 준 것처럼 ‘보호자 없는 병원’ 등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는 시급한 과제다. 그렇게만 해도 1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생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조치는 나 몰라라 하고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 노조 활동가가 지적하듯이 “임금피크제를 수용하면 박근혜는 성과연봉제 도입, 통상임금 삭감 등 추가 개악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당장은 아니어도 임금피크제는 결국 노

동자 모두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노동조건이 열악한데도 병원 노동자들의 근속연수가 늘어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0년 8.2년이던 병원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2014년에는 9년으로 길어졌다. 간호사의 경우 같은 기간에 6.4년에서 7.5년으로 늘어났다. 이는 장차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한 소득 손실의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당하다. 이런 저항은 이제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파업으로 그 힘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기아차

신입사원
이중임금제 철폐
대책위가 구성되다

2011년 이후 입사한 기아차 노동자들이 임금 차별에 맞서 투쟁에 나섰다.

사측은 2011년 이후 신규채용된 신입사원 1천2백여 명의 호봉을 일괄 삭감(동결)했다. 2013년 이후 신규채용된 노동자들에게는 주간연속2교대제 전환에 따른 심야 수당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신입사원들도 당시 적용된 노동강도 강화로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말이다. 신규채용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기존 근속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의 신입 조합원들은 2주 전에 ‘신입사원 이중임금제 철폐 대책위’(이하 대책위) 구성하고,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장기근속 선배 조합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임금 차별을 강요하는 임금피크제도 함께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이중임금제 철폐와 함께 주요 요구로 내걸었다.

대책위는 현장 조합원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참여와 지지를 촉구했다. 신입 조합원 30여 명이 화성공장 곳곳을 누비며 유인물을 배포했다. 많은 동료들과 선배 조합원들이 차별의 부당함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와 응원을 하고 있다.

특히 많은 신입사원들이 대책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대책위 카톡방에는 벌써 1백70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가입했다.

지금 대책위는 기아차 소하리·광주 공장과 현대차의 신입사원들과의 연대로 모색하고 있다.

이명환 기아차지부 조합원/신입사원

투지를 보여 준 조선업 노동자들의 2차 공동 파업

투쟁을 지속하고 확대해야 한다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가 9월 9일과 17일 두 차례 공동 파업을 벌였다. 17일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한진중공업 등의 조선 노동자 2천여 명이 울산에 모여 집회를 열고 가두 행진을 했다.

비가 많이 왔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고 시종 힘차고 진지하게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는 지배자들의 고통 전가에 맞서 “다 함께 투쟁하자”는 단결의 분위기가 뚜렷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중소 조선소에 대한 정부 지원, 산재 근절,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 해결 등을 요구했다.

특히 노사정위 야합을 규탄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조선노연 공동의장인 현대중공업 노조 정병모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노동자들은 “노사정 합의안을 폐기하라”고 외쳤다.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에 보수언론은 “경제 위기에 웬 파업이냐”고 비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 말라 9월 17일 조선노연 2차 공동 파업.

난한다. 2차 공동 파업 당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귀족노조”라고 비난하더니 또다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조선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인상, 고용 불안, 잦은 산재 등에 시달렸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쥐어짠 주요 조선소들은 수조 원이나 이익을 봤다.

올해 주요 조선소들은 경영이 어렵다며 임금 동결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

나 최근 주요 조선소들의 적자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 인상 여력은 충분하다. 예컨대 현대중공업의 매도 가능한 금융자산만 4조 5천2백26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저들은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만 한다.

더욱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임금을 깎고 해고를 더 쉽게 하려는 사측에게 날개를 달아 줄 것이다.

정부와 사측의 고통 전가에 맞선 조선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그런데 이날 예정돼 있던 조선·자동차 노동자 공동결의대회는 무산됐다. 현대차지부가 날씨가 굵다며 갑자기 취소했기 때문이다. 정부 공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일이었다. 현대차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기대했던 노동자들의 실망이 컸다. 연단에서도 집회 취소를 비판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투쟁에 동참시켜야

지금 조선소들은 손실을 만회하려고 쉽게 양보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여당까지 나서서 조선노동자 투쟁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그럴 것이다.

따라서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2차 공동 파업은 노동자들의 투지와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 “계획한 투쟁들을 다했으니 이제 더 해야죠. 임금 동결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사측은 공사 기간을 못 맞춰 더 큰 손실을 볼까 봐 두려

워하고 있다. 그래서 사측에게는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3조 원이 넘는 적자 속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를 4천 명이나 늘렸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더 강력하게 파업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현대중공업 등에서 파업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측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사측의 부담감을 보여 준다.

파업의 힘을 확실히 키우려면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 정규직 노조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요구를 내걸고 노동자들을 투쟁에 동참시켜야 한다. 원하청 연대는 지배자들과 보수 언론의 “귀족노조” 비난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길이기도 하다.

또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 민주노총이 계획한 9월 23일 총파업에 조선 노동자들이 함께 참가해 투쟁을 더 확대한다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막는 것뿐 아니라 조선 노동자들의 요구를 성취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김지태

영국 사회주의자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 대표 당선 유럽의 새로운 정치적 고양을 반영하다

영국 정치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9월 12일 볼 수 있었다. 그날 제러미 코빈이 압도적 차이로 노동당 대표로 당선하며 기성 정치권에 감전 같은 충격을 줬다.

코빈은 토니 블레어를 전범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자 파업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지지했다. 그런 코빈이 경쟁 후보들을 모두 완전히 눌러 버렸다.

코빈의 선거 유세 집회에 수천 명이 참가했는데, 그중 다수는 집회에 처음 참가한 청년들이었다.

노동당 대표로 코빈이 처음 한 일은 난민들을 방어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것이었다. 이것도 시대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징후다.

지난 몇 년 동안 대다수 정치인과 언론이 난민을 공격했는데도 5만 명이 거리로 나와 “난민을 환영한다”고 선언했다.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하자, 많은 평론가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영국은 다르다고 했다. 영국에서는 좌파의 지지가 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우파가 우세하고 인종차별적 정당인 영국독립당이 기성 정치에 대한 대중의 반감으로 수혜자가 된 듯했다.

승리

그러나 코빈이 거둔 놀라운 승리는 이런 안이한 인식을 완전히 날려 버렸다. 코빈의 승리는 사회주의 정치와 긴축 반대 목소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일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코빈의 승리는 전쟁광들과 이민자 혐오자들의 입가에 있던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워 버렸다.

친기업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도 인정했다. “신노동당은 완전히 끝난 듯하다.”

우파들은 코빈이 1980년대애나 통하던 퇴물이며 낡은 정치인이라고 성토한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을 보지 못한 다. 많은 청년들이 코빈의 선거 유세 집회에 참가했다. 그 청년들은 긴축 · 전쟁 · 인종차별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코빈의 말을 듣고 싶어 했다.

코빈의 승리는 최근 유럽 곳곳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정치적 고양을 반영한다. 그리스 시리아와 스페인 포데모스의 성장은 긴축을 지지하는 주류 사회민주주의보다 더 좌파적인 정치 대안을 사람들이 갈구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영국의 모순이라고 하면, 그것이 노동당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지배계급과 주요 언론은 물론이고 압도 다수의 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코빈을 반대한다. 그들은 코빈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코빈 지지자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코빈이 너무 좌파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몇몇 노조 지도자들도 코빈과 생각이 다르다.

언론인 오언 존스는 “이민을 우려하는 정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코빈의 예비내각에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찰스 팔코너 전 상원의장은 코빈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주장하면 예비내각에서 사임하겠다고 위협했다. — 〈노동자 연대〉 편집자]

오만한

그런 주장은 노동계급이 인종차별 반대 사상을 받아들이 수 없다는 비판적이고 오만한 가정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최근의 대규모 시위들은 그런 가정이 틀렸음을 보여 준다.

지금은 코빈이 자기 주장을 다시 주워 담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우파를 주저앉혀야 한다.

[코빈 당선으로] 새로 떠오른 사회주의에 대한 열정이 노동당 내부 투쟁으로 흡수될 위험이 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사람들이 구경꾼 수준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을 뒤집기를 바란다. 시리아 집권 경험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변화를 의회라는 수단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코빈의 승리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긴축과 인종차별에 맞서 전세를 역전시킬 커다란 기회가 왔다. 이제 우리는 이 정서를 노동계급에 깊이 뿌리 내리는 투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71호 / 번역 김준호



사진 출처: Prof. 블라카

유럽 난민 사태와 지배자들의 배신

지배자들이 아니라 난민이야말로 우리와 한 배를 탄 사람들

김종환

9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이 회의를 열고 난민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자신이 제안했던 난민 16만 명 분산 수용 정책조차 통과시키지 않았다.

지금의 난민 사태는 적어도 2011년부터 예견됐다.(이라크 ·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온 많은 난민을 고려하면 더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부터 시리아인들은 이웃 나라들로 피난길에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각국 정부는 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대책을 마련한다고 온갖 부산을 떨지만 그들의 난민 정책은 너무나도 형편없다.

첫째, 전체 난민 수에 견줘 수용하겠다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노동자 연대〉 156호, ‘유럽연합의 난민 대책 — 난민을 더욱 천대하고 억압하는 정책들일 뿐’ 참고).

둘째, 총 16만 명을 분산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유럽연합 각국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조금이라도 더 적은 인원을 더 오랜 기간에 나눠서 받으려고 이전투구를 벌였다.

거기에도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독일 · 오스트리아 · 헝가리 · 슬로바키아 네덜란드는 국경을 봉쇄하고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세르비아도 국경을 폐쇄했다. 발칸반도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주요 철도와 도로는 사실상 가로막혔다. 스웨덴과 폴란드도 이런 국경 통제를 검토 중이다. 독일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이런 도미노 사태가 시작됐다.

국경이 폐쇄되고 더 많은 검문소와 철망이 생기면, 국경 근처에 난민촌이 형성될 것이다. 이 난민촌은 실상 더는 갈 곳 없는 난민들이 국경 근처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갇히는 수용소이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저터널 바로 앞에 있는 프랑스 항구 도시 칼레가 대표적이다.

칼레

오늘날 많은 난민들이 각국 정부들에 국경을 개방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헝가리는 경찰을 동원해 난민을 공격했다.

인종차별적 우파와 파시스트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성장하려 들 것이다. 국경 근처에 몰려 있는 난민들은 언제든지 경찰이나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공격당할 위험이 있다. 정부가 우파 성향이고 대놓고 난민을 천대하는 나라는 특히 더 그렇다.

유럽 전역에서 불거진 난민 위기는 인도

주의적 위기일 뿐 아니라 정치적 위기이기도 하다.

유럽은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긴축과 해고가 이어지고 있고, 노동계급은 실업과 빈곤에 시달린다. 우익과 인종차별적 언론과 정치인들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실업과 빈곤을 강요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난민들이 실업과 빈곤을 확대할 것이라고 악선동을 한다.

시리아 내전이 계속되고, ‘이라크 · 시리아 이슬람국가’가 존속하고, 무엇보다 제국주의의 중동 개입이 계속되는 한, 더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난민 위기도 커질 것이다.

유럽 각국의 인종차별적 정책에 도전하는 것은 유럽 노동계급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복지 · 공공부문 축소 반대 투쟁과 난민에 연대하는 활동은 서로 연결된 투쟁이다.

유럽연합은 국경을 개방하고 난민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터키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일란 쿠르디를 보면서 모두 눈물을 흘린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해고, 긴축, 국경 폐쇄에 반대하는 눈물이다. 그러나 지배자들의 눈물은 긴축에 대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자신들의 인종차별적 난민 정책을 숨기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다.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난민 연대 시위

9월 12일 유럽 전역에서 난민 연대 시위가 일어났다. 수많은 유럽 노동자와 청년들은 난민들의 처지에 공감하며 유럽연합의 미온적 대처에 항의했다.

영국 런던에서는 약 5만 명이 거리로 나와 난민을 방어하는 시위를 벌였다. 맨체스터에서는 2만 명, 브리스톨에서는 3천 명이 거리로 나왔다. 그 밖에도 여러 도시에서 수백 명 규모의 시위가 있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3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덴마크 정부에 강경한 이

민 통제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1만 4천 명이 거리로 나와 난민을 환영했고, 인종차별적 우파들이 조직한 “독일 애국심의 날”에 맞불 시위를 벌였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5천 명이 난민 연대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가 든 배너 중에는 “무슬림과 난민을 환영한다”는 글귀가 적힌 것도 있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3천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시위대가 든 배너에는 다음 같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누구도 불법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다”, “유럽이야 일어나라”, “국경을 개방하라”, “우리도 이민자다.”

아일랜드 더블린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약 1천 명이 난민 연대 시위를 벌였다.

그 밖에도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리스 아테네,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난민 환영 시위가 열렸다.

9월 19일에는 프랑스 항구 도시 칼레에서 난민 연대 시위가 또 예정돼 있다.



고용허가제 폐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투쟁과 연대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8월 30일 이주노동자 행진.

이주노조 규약시정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정선영

지난 8월 20일 이주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이후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같은 요구를 규약에서 빼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 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주노조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뒤통을 얻어 줬고 이를 배경으로 노동부는 이런 공격을 벌였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폐지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권리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는 온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요구들이다. 이런 요구들은 이주노조의 기본 정신이자 이주노조가 계승해 온 피땀 어린 투쟁의 산물이다.

이주노조는 노동부 앞 농성까지 벌이며 노동부의 부당한 요구에 맞섰다. 이주노조의 정당한 항의가 시작되자 연대도 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주노조는 노동부의 요구를 수용해 규약에서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요구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이라는 추상적 문구로 수정했다.

이주노조 간부들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또다시 기나긴 투쟁과 정부 탄압 속에서 조직이 악화될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크게 느낀 듯하다. 물론 2003년 명동성당 농성 때부터 지금까지 이주노조 동지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을 익히 알기 때문에, 우리

는 이주노조 간부들의 고심과 위기감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옳았다거나 불가피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규약 개정 강요는 법적으로 노조 설립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저항과 조직화, 즉 운동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규약 개정을 근거로 이주노조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 할 것이다. 이주노조 활동가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과 제약 속에 이주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과 조합원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물론 이주노조에 연대해 온 여러 단체들도 이주노조의 규약시정을 대체로 수긍한다. 급진좌파라 할 수 있는 노동계급정당추진위나 사회진보연대도 기관지를 통해 규약시정이 큰 문제는 아니며 합법 상황을 활용해 조직화를 잘해 나가자는 기사를 냈다.

노동계급정당추진위의 〈변혁정치〉에는 “규약을 변경하고 안 하고가 핵심이 아니”라며 이번 규약 변경을 통한 합법화가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인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싸움으로 나가기 위한 시금석”을 놓았다고 두둔하는 기사가 실렸다. 사회진보연대는 〈오늘보다〉에서 이번 결정이 “대중적인 조직화”를 위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동안 이주노조가 정부에 맞서 혹독한 시련에도 버티며 잘 싸워 왔으니, 이제는 각종 제약을 감수하고서라도 노조 합법화를 통해 조직을 확대해 갈 때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기조는 이주노동자 권리를 더 제약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

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면서도, 경제 침체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저임금, 유연 노동자로 활용하기 위해 규제는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정주를 법률로 금지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따라서 정부의 탄압이 계속될 상황에서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합법화한 뒤에 그 노조를 활용해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은 한계에 부딪히기 쉽다. 이주노조 내에서 온건화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좌파들이 이주노조의 규약 시정을 두둔하는 것은 단견이다.

오히려 이주노조와 좌파 활동가들은 정부의 이주노조 ‘길들이기’에 맞서며 투쟁과 연대를 강화해야 이주노조의 실질적인 합법화를 쟁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이주노조도 고용허가제 폐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등 정부에 맞선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한 투쟁과 연대는 앞으로 더욱 강화돼야 한다.

상호 토론

그런데 한편에서는 한국의 연대단체가 이주노조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 이주노조의 활동에 한국 활동가들이 자신의 입장을 내고 설득·비판하려는 것이 이주노동자 운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투쟁과 운동에서 당사자들의 의견과 리더십은 당연히 필요하고, 연대의 출발로서 이를 존중하는 동지적 자세로 임하는 것은 중요하다.

마르크스가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을 강조했듯 노동자들은 스스로 투쟁하고 조직하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계급적 각성을 이루고 운동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에서도 2000년대 초반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혜적 태도에 맞서 스스로 리더십을 형성하기 위한 운동 내 ‘투쟁’이 있었고, 좌파들이 이를 지지한 것은 옳았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혜적 태도는 진정한 노동계급 연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시혜적 태도가 아니라 동지적 연대의 관점을 취해야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들이 노동운동 안에서 단결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보다 더 차별받고 천대받는 위치에 있다. 좌파들이 이런 점을 세심하게 고려하며 이주노동자 운동에 연대하는 것은 옳다. 레닌도 억압받는 민족의 민족자결권을 지지하면서 억압받는 민족의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민족의 노동계급의 요구는 강조점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을 존중한다는 이런 태도가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이 아니라면 이 운동과 투쟁에 주장과 의견을 내놔선 안 된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이주노동자 운동은 한국 노동계급 운동의 중요한 일부로서 계급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1995년의 명동성당 쇄사슬 농성과 2003~2004년 투쟁은 각각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반 노동자성과 반 인권성을 폭로해 한국인 노동자들의 투지와 자신감을 높이기도 했다. 반대로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주노동

자들의 투쟁에 자극을 주기도 한다.

경제위기 시기에 한국 지배자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며 전체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정부의 이간질에 맞서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좌파 활동가들의 노력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 활동가들이 전체 계급투쟁을 전진시키려는 과제를 놓고 상호 토론을 강화하는 것은 운동의 발전과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과정은 지배자들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것에 맞서 계급적인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고, 운동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각각의 투쟁을 자율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전체의 일부로 생각하며 개입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157호 온라인 기사를 읽어보세요

★ 최저임금 38퍼센트 올리고, 노조 가입 권하는 대통령? 오바마는 미국 노동자들의 친구가 아니다

★ 친일·독재 미화, 착취 은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 15년째 변함없는 남녀 임금 격차 왜 이다지도 불평등한가?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동맹휴업 “교육재정 확충하고 시간제가 아닌 정규 교사를 늘려라!”

그리스

총선이 다가왔는데 시리자에게 기회는 없을 듯하다

시리자보다 더 급진적인 정당들이 특히 노동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늘리면서 좌파 정당 시리자의 위기가 해소되기 힘들 듯 하다고 아테네에서 **데이브 수엘**이 전한다. 데이브 수엘은 영국인 사회주의자로,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의 기자다.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말이다.

9월 20일 그리스 유권자들이 올해 들어 세 번째 선거를 치른다. [첫 번째는 1월 총선, 두 번째는 7월 5일 국민투표.] 집권당 시리자가 긴축을 받아들이는 것을 계기로 분열하면서 조기 총선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5일, 시리자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국제 채권단이 제안한 긴축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긴축안 반대 측이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며칠 만에 그는 더 바짝 조이는 긴축안에 합의했다. 야당 시절 시리자는 긴축재정에 도전하면서 성장했던 정당이다. 시리자는 빠르게 분열했다. 본지의 그리스 자매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시리자는 선거운동에서 치프라스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이전 선거 때와 달리 치프라스가 쫓기는 사실이나 강조하면서 시리자가 미래라고 주장합니다. 치프라스의 주된 전술은 투표를 시리자나 보수정당인 신민당이냐로 양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두 정당이 함께 긴축에 찬성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그리스 지배계급은 치프라스에게 신민당과 연합정부를 수립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시리자 혼자 정부를 수립하기에는 의원 수가 부족할 듯하다.

일터의 정서

그리스 〈노동자 연대〉의 기자 기오르고스 피타스는 반자본주의 좌파연합 안타르시아가 조직하는 사업장 회의들에 참석한다. 그는 〈소셜리스트 워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수정당인 신민당이나 중도좌파인 사회당에 투표하는 것의 의미가 단지 몇 년 전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특히 일터에서는 노동자들이 좌파만 봅니다. 즉, 시리자와 시리자에서 분열해 나온 민중연합, 공산당, 안타르시아만 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치프라스는 양해각서에 합의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좌파들은 대안이 무엇인지를 답해야 합니다.”

민중연합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야 한다고 옳게 주장한다. 안타르시아는 노동자 관리가 있어야 가능한 더 급진적인 정책을 주장한다.

기오르고스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활동가들 70명가량이 시리자를 탈퇴했습니다. 그중 최대 30명이 민중연합에 가입했습니다. 몇몇은 안타르시아에 가입했습니다. 대부분은 사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 시리자는 더 많은 긴축 조치를 통과시키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리자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리자에게 세 번째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파시스트에게 살해된 파블로스 피사스를 기억하자

파노스 가르가나스

9월 18일은 황금새벽당 지지자들에게 살해된 반파시즘 활동가이자 힙합 가수인 파블로스 피사스의 2주기이다.

그의 아버지는 9월 14일에 열린 재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황금새벽당의 지지율은 지난 선거 때와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월 10일 피사스가 살해된 아테네 근교 항구 도시에서 황금새벽

당이 행진을 벌이려던 것을 반파시즘 활동가들이 가로막았다.

반파시즘 활동가들이 거리를 점거해, 황금새벽당은 행진을 포기하고 그들의 사무실 6층에서 집회를 해야 했다.

시위대는 항구로 행진해서 그곳에 도착한 난민들에게 연대를 나타냈다. 총선 직후인 9월 25일에는 대규모 반파시즘 집회가 예정돼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71호 / 번역 이진화



전망이 불투명해진 남북 대화 8월 22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북한 로켓 발사·핵실험 시사

현 남북합의 국면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준다

김영익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즈음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했다. 그 후 〈조선중앙통신〉은 핵실험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때문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한반도에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트리거 조항’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최근의 남북 유화 국면은 취약한 것이고 머지않아 상황이 다시 바뀔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해 왔다. 동아시아의 제국주의의 갈등이 점증해 오면서 한반도의 불안정과 모순도 심화돼 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에 2013년 수준의 한반도 긴장이 재현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남북 대화에 나서던 북한 당국이 얼마 안 가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다시 말하기 시작한 것은 현 ‘화’의 국면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 준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평화적 우주 이용’

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공 위성 발사체와 미사일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거의 없다. 북한 국방위원회 자신이 2013년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케트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히며 장거리 로켓 개발의 군사적 성격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은 북한과는 견주어 어려울 만큼 더 많은 자원을 미사일과 핵 전력 증강에 쏟아붓고 있다. 미국은 2023년까지 ‘핵무기 현대화 10개년 계획’에 3천5백50억 달러(한화 약 4백14조 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게다가 오바마 정부는 전임 부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유사시 북한을 핵무기로 선제 공격할 가능성을 열어 뒀 왔다. 중국도 지난 9월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공개하며 힘을 과시했다. 이러면서 강대국들이 북한 측에 로켓을 발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할 자격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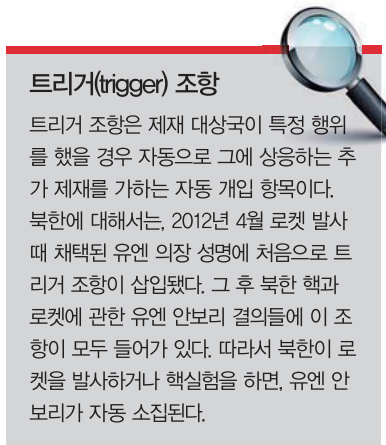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의 갈등이 점증해 오자, 미국의 대북 정책도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오바마 임기 내내 유엔 안보리 결의들과 군사 훈련 등으로 대북 제재와 군사 압박은 강화된 반면, 6자회담은 전혀 열리지 않고 있다.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이자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 채널 담당자인 스티븐 사일러가 최근에 물러났지만, 오바마 정부는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거의 없는 것이다. 미국 정계에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주장이 간혹 나오지만, 아직은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다.

북한은 북·미 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 대화로 얻을 게 많지 않다고도 보는 듯하다. 9월 17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북남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의 “비열한 책동”을 비난한 것을 보면 말이다. 박근혜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 등을 봐 가며 남북 대화의 속도를 조절해 나간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현재의 [대북] 경제제재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북한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 여지는 거의 없음을 보여 준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중국한테 북한을 압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더 크다.

9월 25일의 미·중 정상회담이나 9월에 시작한 유엔 총회 등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대북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북한은 반발하며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공식화하고 발사 준비에 착수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다시 높아질 것이다.



일본 안보법안

아베의 폭주와 새롭게 부상하는 운동

최미선

9월 19일, 일본 ‘안보법안(11개의 안보 관련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지배계급의 오랜 숙원인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인 ‘안보법안’은 그동안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반대 투쟁(안보투쟁) 이후 최대 저항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아베 내각이 반대 여론을 거슬러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아베 내각은 9월 16일에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안보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순식간에 국회 앞에 모인 시위대 수만 명과 야당의 반발로 본회의의 개최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지난 8월 30일 전국 1천 곳 이상에서 ‘전쟁을 용납하지 않는다·9조를 망가뜨리지 마라! 총력행동 실행위원회’(이하 ‘총력행동 실행위’) 주최로 열린 ‘안보법안 폐기! 아베 정권 퇴진! 8·30 대행동’ 집회에 결집한 노동자·학

생·시민들은 우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날 국회 앞에만 12만 명이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아베를 향해 참아 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참가자들은 “안보법안을 강행하려는 아베를 지금 막아야 한다!”며 국회 앞 도로로 진격했다.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하며 집회를 연 것은 1960년 안보투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참의원 본회의의 표결 직전까지, 국회 앞과 전국 각지에서는 연일 수만 명이 ‘안보법안 폐기, 아베 즉각 퇴진’을 외치며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특히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로 여겨지던 청년·학생들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본 사회가 우경

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는 달리, 이들은 이라크전쟁 반대 운동, 반핵 운동 등을 통해 2000년대 들어 조금씩 급진화하기 시작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 긴급행동(SEADLS, 실즈)’과 같은 청년·학생 단체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법안의 참의원 통과를 강행하는 것도 동아시아와 한반도 불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에 힘을 실어 온 박근혜에게도 한반도 불안정에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만큼 현존 제국주의 질서가 온존하고 미국의 대북 압박이 지속하는 한, 한반도 평화는 요원한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분열돼 있던 일본의 운동 세력이 단결해 ‘총력행동 실행위’를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연대하는 것도 운동이 확산되고 결집하는 데 큰 구실을 했다.

노동자 행동

경제 위기를 구실로 고공 전가를 강요받아 온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9월 11일 지역 9곳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아베와 ‘안보법안’



8월 30일 안보법안에 반대해 일본 국회 앞에 12만 명이 결집했다.

에 반대해 2시간 파업, 작업 거부, 연차 휴가 등 행동에 나섰다. 이 밖에도 병원, 교사, 철도, 인쇄·출판 등 다양한 직업군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포함한 중식 집회, 작업장 홍보전 등을 벌였다. 개인으로만 참가하던 노동자들도 조직 대열로 집회에 참가했다.

8월 중순 한반도 긴장 사태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던 아베 정권 지지율은 다시 하락을 경신하고 있다. 운동이 확산되자 ‘연휴 지나면 다 잊는다’며 저항 운동을 무시하던 우파들 안에 서도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아사히 신문〉 여론 조사를 보면, 국회 회기를 연장했음에도 ‘논의가 불충분(75퍼센트)’하고 이번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필요가 없다(68퍼센트)’는 답변이 다수였다.

그런데 왜 아베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안보법안’을 고집했을까? 아베 내각은 집권 직후부터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일본판 NSC 설치, 무기 수출 3원칙 폐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강행해 왔다.

전후 일본 지배자들은 줄곧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추고 싶어 했다. 군대 보유와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는 이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개헌 시도는 번번이 저항에 직면해 좌절됐고, 이 때문에 일본 지배자들은 우회적 방식으로 사실상의 ‘일본 군대’를 유지·강화해 왔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 경기 침체와 중국 경제의 성장은 일본 지배자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대국 2위에 오른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대해 왔다. 일본 지배자들은 아시아에서 누려 왔던 자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지위가 중국에게 위협받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일본 지배자들의 위기감을 부추긴 것이 바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면 지역 동

현재 추진 중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떻게 볼 것인가?

김인식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진보결집+ 등 4조직 대표자들이 올 11월에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진보혁신과 결집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4자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4자 연석회의는 “보수정치 독점 구조의 혁파”를 포부로 밝혔다. 대중적 불신과 혐오의 대상인 양당 체제의 혁파는 진보성을 떠는 정치 프로젝트다.

오랫동안 한국 정치 체제를 지배해 온 자본가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만만찮은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워낙 껄적죄해, 그 당 왼쪽에서 진보 정치 세력이 성장할 공간이 다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 위기 때문에 개혁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아 한국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은 참말이 아니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 상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 상태가 나빠, 집권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개혁을 제공하지 못하거나(개혁 없는 개혁주의) 심지어 도로 빼앗으려 하면서(개혁을 빼앗는 개혁주의) 서구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노동계급의 충성심을 크게 잃었다. 청년들의 광장 점거 운동에서 “정당 반대”가 유력한 정서로 떠오른 배경 중에는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의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 운동의 유력한 이데올로기로서 개혁주의가 죽었다는 뜻



9월 2일 '진보혁신과 결집을 위한 연석회의'의 구성을 알리는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진보결집+ 4조직의 기자회견.

은 결코 아니다. 영국 노동당 내 좌파인 제러미 코빈이 긴급 반대 정서에 힘입어 결국 당수로 선출된 데서 보듯이, 심지어 서구에서도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생명력은 질기다. 개혁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겪는 노동계급의 모순된 일상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투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노동조합의 협상이나 “국회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정치 경향으로서 개혁주의는 계속 존속할 수 있다.

2000년에 작고한 팔레스타인 마르크스주의자 토니 클리프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들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한,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없을 때, 노동당은 결정적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아직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집권을 경험하지 못했다. 시리자의 경우에서 보듯이, 개혁주의 정당의 모순은 집권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계급은

아직 집권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배신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성장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점진적 사회 개혁 전략과 달리, 그 당의 성장은 점진적이지 않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8년에 분당했지만, 당 역사의 전반부는 눈부시게 성장했다. 창당 4년 만에 국회의원 10명을 보유한 제3당이 됐다. 군부독재가 몰락한 1974년에 창당한 그리스 사회당(PASOK)도 7년

만인 1981년에 집권했다.

물론 현재 많은 선진 노동자들이 진보 정당들의 지리멸렬한 상태에 실망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국제적·국내적 경험을 종합해 봤을 때, 이로부터 곧장 개혁주의 정당은 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노동계급의 의식 흐름에 둔감해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개혁주의 정당의 최신 상태와 계급투쟁 등을 예의 주시하며 설득력 있는 전술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새 정당, 진전이지만 문제점도 발생시킬 것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같은 경제적 기초뿐 아니라 정치적 기초 위에서도 스스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자본가 정당들에 맞서 대중적 진보 정당이 등장하는 것은 진전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경험에서 봤듯이, 노동자 정당이 건설된다 해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강령에서 “사적 소유권 제한”, “생산수단 사회화”를 표방해 자본가 정당들과는 다른 좌파 개혁주의 정당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 당의 지도부와 의원단은 노무현 정부/열린우리당과의 “개혁 공조”를 중시했다.

4자 연석회의가 추진하는 새 정당은 그나마 민주노동당보다 우경적인 개혁주의 정당이 될 것 같다. 정의당은 통합보다는 정의당으로의 “수혈”을 원한다. 반면, 나머지 단체들은 통합을 선호한다. 그래서 아직 당명, 지도 체계, 강령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새 정당은 정의당의 재창당 형식을 취할 것 같다. 4자 연석회의 내 저울추가 정의당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지향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당의 사회적 구성, 재정, 투표 기반은 노동계급적

인 반면, 당의 지도부와 정책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당이다. 이를 두고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은 “자본주의적 노동자 당”이라고 했다. 이와 비슷하게,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헌법 안의 진보”라고 불렀다.

이런 모순된 성격 때문에 노-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들에서 정의당은 흔히 이율배반적 태도를 취한다. 예를 들어 심상정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지하면서도 일방적 추진은 반대했다. 확실하게 자본가 계급의 편을 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모순의 실천적 결론은 사회적 타협 — 계급 평화 — 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여야 아합과 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의 배신이라고 비판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라고 두둔했다.

좌파 포퓰리즘

한편, 김세균 국민모임 대표는 이런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한국 상황을 가미한 개혁주의 정당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는 “기본 모순”(노-자 모순)보다 “주요 모순”(독점 재벌 대 압도적 다수의 국민 대중)을 우선 해결하는 반신자유주의 범진보연합전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진보정치의 과제와 방향’, <레디앙>, 2015년 7월 21일) 기본 모순과 주요 모순의 (마오쩌둥식) 구분이 쓸데없는 현학일 뿐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할 여유가 없다.

김 대표는 스탈린주의의 인민전선 (“반파쇼 범민주연합전선”)을 논거로 댔다. 그가 정동영 등 부르주아 포퓰리스트 정치인들과 함께 국민모임을 만든 것은 이런 노선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모순을 우선 해결하자는 주장의 실천적 함의는 “소수 독점 재벌”에 맞선 계급연합이다. 계급연합은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먼저, 사회적 리버럴(진보적 자유주의)까지 포함하는 계급연합 정당을 만든다. 그리고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당인 새정치연합과 연립정부를 구성한다. 김세균 대표는 연립정부 참여 문제를 “전략적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적 선택의 문제”라며 그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전에는 자본주의를 문제 삼지 말자는 단계론은 자본주의의 지배적 형태가 신자유주의인 오늘날 공상적이다.

무엇보다 이런 포퓰리즘(좌파적일지라도)은 계급을 가로지르는 계급 협력주의 전략이기 때문에 노-자 기본 모

순에 의한 투쟁을 약화시킨다. 재벌은 공중에 봉 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유기적인 한국 자본주의 구조의 정점일 뿐이다. 그러므로 재벌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의 경제적·정치적 지배 구조를 해체시켜야 한다. 이것은 “국민 대중”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계급투쟁 문제로서, 반자본주의 혁명의 성공에 조금 못 미치는 수위의 계급투쟁이 전개돼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수위의 계급투쟁 속에서 왜 노동계급과 대중이 재벌 문제 해결에서 멈춰야 하는가? 이게 현학이 아니면 무엇인가.

계급투쟁보다 선거적 해법 중시하기

4자 연석회의의 기본 문제의식은 통합한 진보 정당이 주도력을 발휘할 때 노동계급의 현안과 사회·경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계급투쟁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고, 기본 동력으로도 감안되지 않는다. 4자 연석회의의 진단은 투쟁과 ‘정치’를 분리시키고는 선거에서 답을 찾는 개혁주의 실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정의당 지도부가 그 전형이다. 정의당 지도부는 “원내정당화 전략”(심상

정), “진보의 세속화”(노회찬), “진보의 현대화”(천호선)라는 이름으로 운동과 정치를 날카롭게 분리시키고 있다.

그래서 “조직된 노동자들”의 “정치적 실천, 계급적 책무”가 “노동정치의 복원과 진보정치의 혁신과 결집”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훈·신승철 민주노동당 전위원장 등, ‘노동정치의 복원과 진보정치의 결집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5년 6월 25일) 나경채 전 노동당 대표도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의 “무기력”을 넘어서기 위해 “진보정치 결집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보다>, 제2호, 2015년 3월)

현재 노동자 투쟁은 결코 침체 상태가 아니지만, 충분히 강력하게 발전한 상태도 아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지배자들의 노동자 조건 공격을 반대한다. 그중 전투적 부문은 투쟁하고 있지만 그 투쟁들은 곧잘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박근혜도 정치적 타격을 받았었다.

이런 사태전개는 제도권 정치 내 진보 정당의 취약성 문제와 그다지 관계가 없다. 핵심 문제는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들의 보수적이고 소심한 대응이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이 더한층 진전하지 못한 진정한 이유도 노동계급

▶ 11면 상단으로 이어짐

▶ 10면에서 이어짐

이 자신의 경제적 힘을 사용하며 정치적 향의 운동에 동참하도록 소명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소심하고 지나치게 온건한 방침이었다.

나경재 전 대표는 정의당의 우경화를 막기 위해 진보 결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주장에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지난 6월 노동당 당대회를 앞두고,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는 201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 후에는 연립정부

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나 전 대표를 비롯한 진보결집+ 성원들은 정의당의 우경 노선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통합 논의를 하는 마당에 공개적 비판이 공연히 긴장을 부릴까 봐 꺼렸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진보결집+가 사회연대전락을 2016년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제안한 것을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사회연대전락은 정규직 고소득 조직 노동자들이 국가

와 기업주에 양보해 노동계급 내 격차를 완화하자는 정규직 양보론이자 노-자 간 사회적 타협론이다.

그래서 진보결집+의 진정한 동기는 노동당으로는 3년 연속 예정돼 있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초조감인 것 같다. 진보결집+ 리더들의 대부분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사회주의 강령을 지지하고 “사회운동적 정당”을 주장했는데, 지난 10년 새 꽤 많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듯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총진군대회. 민주노동당은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거리 항의 운동을 배경으로 제3당으로 부상했다.

사회주의자들이 새 정당에 참여해야 할까?

김세균 대표는 “진보좌파 세력”이 새 정당에 참여해 “전선운동의 급진화 등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거부하는 좌파에겐 희망이 없다”고도 했다. 과연 그럴까?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동력은 계급투쟁에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을 고무하는 것을 크게 강조한다. 그것이 선거에도 더 도움이 된다. 1997년 12월 대선에서 일당국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1996년 12월부터 1997년 1월까지 전개된 민주노총 파업(과 IMF 금융 공황)이 낳은 정치적 각성의 효과였다. 또, 2004년 3월 일어난 노무현 탄핵 반대 거리 항의

운동이 당시의 정치적 지형을 왼쪽으로 이동시킨 덕분에 그 직후 치른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일약 3당으로 부상했다.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곧 개혁주의 정당을 종파적으로 대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전투적이고 선진적인 노동자들에게 새 정당은 크게 미흡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정의당 의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현재 통합이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는 방향도 아니다.(물론 개혁주의 정당은 지배계급과 노동계급의 이해 충돌을 ‘국민’의 이름으로 조화시키려

할 것이고, 그래서 개혁주의적 본질은 바뀌지 않은 채로 지그재그 할 수 있다.) 이 점은 노동정치연대 소속 공부문 ‘중앙파’ 활동가들의 조직인 ‘공공운수현장조직(준)’이 다음과 같이 “대책 없는 투쟁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당위적인 총파업을 외친다고 투쟁전선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 노동자 대중의 ‘정치 투쟁 의식’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업장 담장을 넘는 의식화의 장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공간이다.”(〈레디앙〉, 2015년 8월 28일자)

따라서 선진 노동자들이나 급진적

청년들이 투표를 넘어 새 정당에 입당하는 수준으로까지 지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도 입당 전술을 취할 이유는 없다. 그보다는 특정 쟁점을 놓고 새 정당의 좌파 계열과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물론 더 넓은 범위의 노동자들은 정치 대안 부재 때문에 선거에서 새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 선거에서 더 좌파적인 대중 정당이 부재한 가운데 새 정당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등 부르주아 정당과 맞붙는다면 사회주의자들은 당연히 새 정당에 투표하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물론 환상을 경계하면서 말이다.

4자 통합과 진보대통합

옛 통진당 세력은 진보대통합을 요구한다. 반면, 4자 연석회의는 이들을 배제했다. 두 가지 쟁점이 이들 사이에 놓여 있다 —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사태와 북한 문제.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사태 당시 NL계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자신들은 선거 부정을 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많은 언론이 지켜보는 중앙위원회 회의장에서 집단 폭력을 행사해 의사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 문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 없이 과연 진보대통합이 될 수 있을까.

북한 문제는 훨씬 더 근본적이다. 2000년대 동안 사회민주주의와 스탈린주의가 한 정당 안에서 동거했다. 민주노동당은 스탈린주의자들이 대거 입당한 2004년부터 스탈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는 모순이 있었다. 그만큼 동거는 불안정했다. 2005년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가 민주노동당 안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민주노동당의 가장 주된 분당 이유 하나도 북한 문제였다.

그 뒤 통합진보당으로 재통합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그에 따라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피할 수 없게 된 북한에 대한 태도 문제가 근저에 있었다. 분당 후 정의당의 행보가 이를 보여 준다. 지금 정의당은 냉전 시기 서구의 반공주의적 사회민주주의를 연상시키는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정의당 지도부는 천안함 위령탑을 참배했고, 심상정 대표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북한의 반인도적 전쟁범죄라고 규탄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질타했다. 〈동아일보〉는 정의당 지도부의 천안함 위령탑 참배를 두고 “종북과 선 긋기”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대통합이 가능한 유일한 방식은 (선거법 문제가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정당을 만들되, 그 내부는 정치적·조직적으로(즉, 강령상으로는나 규율상으로) 느슨한 공동전선적 운영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강령을 연합 정당에 강요하지 말고, 각자의 강령으로 활동하는 모델이다.

이참에 옛 통진당 계열도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 정당을 만들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합법 정당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이다. ‘남들 끌어들여 정당 만들기’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분당을 겪으며 파산했다. 많은 좌파들이 그 경험에 진저리를 쳤다. 국제적으로 스탈린주의 세력은 국가 탄압에 맞서 합법적인 정당과 전선체 두 날개로 대응해 왔는데, 옛 통진당 계열도 이 경험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10가지 태도

①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조직 노동자들과 연계돼 있으므로 조직된 자본과 연계된 순전한 부르주아 정당보다 어느 경우든 더 낫다.

② 투쟁 없이 진보 없다.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사람들이 획득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③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부르주아 정당과 싸우려 하지 않을수록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선거에서든 다른 어느 전선에서든 부르주아 정당을 이기기

가 더 어려워진다.

④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타협하고 얼버무리고 발뻠할수록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투지는 약화된다.

⑤ 사회민주주의 정당 지지자들의 투지가 약화될수록 사용자들, 국가 관료들, 우파들의 기가 살아나고 그 세력이 강화된다.

⑥ 선거로 선출된 의회의 권력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기업주, 국가 관료, 경찰 수뇌부, 사법부, 주류 언론

등의 권력에 의해 졸권 좌절을 맞게 된다.

⑦ 사회민주주의 정당 정부가 기업주, 국가 관료, 경찰 수뇌부, 사법부, 주류 언론 등에게 ‘공정’하려 애쓰면 애쓸수록 사회민주주의 정당 정부는 그들의 포로가 된다.

⑧ 사회민주주의 정당 정부가 그런 권력자들의 포로가 되면 될수록 사회민주주의 정당 정부는 자신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음번 선거에서는 거의 패배하

민주노총의 정치/선거 방침에 대해

2012년 통합진보당이 분열하면서 특정 정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은 소멸됐다. 그 여파로 12월 대선에서도 민주노총은 선거 방침을 내놓지 못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먼저, 정치 방침과 선거 방침을 구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복수의 진보 정당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 지지 방침 문제는 까다롭고 분열적 긴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옛 통진당 계열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배타적 지지 방침을 부활시키자고 한다. 이를 통해 노동 중심 진보대통합을 하자는 것이다. 이들이 여전히 인민전선(전략적 야권연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중심 진보대통합은 노동자 정당을 만들어 부르주아 야당과 계급 협력을 하자는 노선이다. 현 시점에서 배타적 지지 방침 부활은 진보 정당들이 분화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는 추상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선거 실리를 위해 노동조합을 분열시키고 투쟁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발상이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아무 정치 방침도 채택하지 않으면 자본가 정당들, 특히 새정치연합이 그 틈을 비집고 노동조합 속으로 파고들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같은 부르주아 정당을 배제한 진보 정치 세력들을 지지한다는 진보/좌파 다원주의 정치 방침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민주노총은 2014년 지방선거 대응 방침으로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정치연대, 녹색당을 “노동정치세력”으로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시점상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노동자들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단결시킬 수 있는 선거 방침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민주노총은 같은 선거구에서 노동자 정당 후보들이 서

로 경쟁하지 않도록 후보 단일화를 권유해야 한다. 경쟁은 노동자 유권자들에게 분열로 비쳐 실망과 환멸을 자아내 투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할 것이다.

또, 민주노총은 노동자 밀집 지역이나 노동자 정치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 진보 정치에 정치적 상징성이 큰 지역(이른바 “전략 지역”)을 선정해 투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지 후보에 대한 민주노총의 정치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 출신이라는 이유가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기준일 수는 없다. 배신의 전력을 공개 반성하지 않은 우파적 노동조합 관료도 그 조건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유기적 연관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개혁” 반대, 기성 자본가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같은 정치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야권연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NL식 또는 정의당식 전략적 야권연대는 선거 실리는 줄지 몰라도 계급투쟁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야권연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1) 어쩔 수 없는 경우에, (2) 공동 집권을 목표로 하지 않고, (3) 그저 특정 선거구(들)에 한정해, (4) 후보 단일화 수준의 제후를 하면서, (5) 정치적 비판을 삼가지 않는”(2014년 11월 6일 노동자연대 성명, <http://wspaper.org/article/15085>) 야권연대는 정당한 전술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정당 투표 문제가 남아 있다. 진보 정당이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당 투표도 진보/좌파 다원주의에 근거해 그 정당들 중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무상보육 위기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정부 책임

이현주

전면 무상보육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결국 보육 정책을 후퇴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2세 아이들을 둔 비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취업모의 아이든 비취업모의 아이든 상관 없이 0~5세 영유아라면 최대 12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료를 지급해 왔었다.(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이런 후퇴는 이미 박근혜표 '무상보육'이 시작될 때부터 예고된 바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 범위가 '전 연령,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 지배자들은 미래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고용률을 끌어올려 착취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무상보육 확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무상보육' 대상을 대폭 확대해 놓고는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은 지려 하지 않았다.

가령 박근혜 정부는 2008년에 2조 3천억 원에 그쳤던 보육예산을 2013년에 약 8조 원으로 대폭 늘려 놓고는, 이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떠넘겼다. 그 때문에 '무상보육' 시작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불거졌다. '무상보육 디폴트'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렇게 중앙 정부가 재정 부담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무상보육'은 언제든 중단될 위기에 있었다. 우파들은 무상보육의 재원 문제가 불거지자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균분을 땀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도 무상보육 때문인 양 비난했다.

그러다 마침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계급 전체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고, 이런 맥락에서 여성



기업과 부유층에 과세해 재원 마련하면 어느 한쪽이 희생돼야 할 필요가 없다.

들에게도 희생을 강요하려 한다.

고약하게도 정부는 무상보육 위기의 책임을 비취업모들에게 돌렸다. 그리고 비취업모와 취업모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 정부가 재정 부담 책임을 방기해 생긴 무상보육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여성들이 육아 부담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경력 단절을 겪는 현실에 대한 책임 회피이기도 하다. 여전히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압도적 요인은 육아 부담이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뒤로한 채 정부가 전업주부들을 '놀면서 애도 안 보는 사람'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업주부들 사이에서는 "누가 전업맘이 되고 싶어

서 됐냐"는 얘기가 나온다.

취업모를 위하는 것인 양 하지만, 이번 개악은 취업모들의 보육시설 이용률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이다. 개악안대로 하면 취업 사실을 증명해야 전일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증명이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상당하다.

'0~2세 영아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거나 '아이들에게 장시간 어린이집 보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보육 전담자는 여성'이라는 차별적 인식을 부추기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사실 이런 주장은 보육을 지원해(턱없이 부족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와도 모순되는 것이다. 여성의 고용률을 늘리겠다면서도 이

를 위한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정부는 3~5세 대상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미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떠넘겨 왔다. 이를 아예 시행령으로 규정해 버리려는 것이다. 당연히 해도 시도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

여기서도 정부는 갈등을 부추겨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는 바람에 초·중·고등학교의 운영비가 삭

감돼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을 줄이는 실정인데, 영유아 '동생들'을 위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더 양보하라는 식이다.

그러나 반드시 어느 한 쪽이 희생돼야 할 이유는 없다. 재원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재원은 대기업과 부유층에 과세해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사코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 기업주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따라서 여성운동과 노동자 운동은 보육서비스 축소 움직임에 따른 정부와 친사용자 언론들의 이간질 시도에 반대하며, 기업과 부유층에게 증세해 보육서비스의 보편적 질 향상을 이룰 것을 요구해야 한다.

보육 공공성 강화해야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보육 지원 방식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2000년대 동안 한국의 보육서비스 규모와 보육에 대한 정부 지출은 증가했다. 그 결과 2012년 현재 한국의 영유아 74퍼센트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한다. 이는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보육서비스는 민간 시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보육시설은 1990년 1천9백19개에서 2013년 4만 3천7백70개로 크게 늘었지만, 늘어난 보육시설의 대부분은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이었다. 반면, 2013년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은 고작 5퍼센트대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었다.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

해 보육서비스를 확대하면서도 비용은 가능한 적게 지출하고자 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화 전략이 안성맞춤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부는 민간 보육시설 설립 요건을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돈을 주고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이런 방식은 어느 정도 국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긴 하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국공립 보육시설 설립)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노동계급 가정의 처지에서 보면, 국가가 돈으로 보육을 지원하는 방식은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보다는 낫기는 하다. 그러나 보육을 제공하는 주체가 민간(시장)이다 보니 문제가 많았다. 민간 보육시설 운영이 이윤 추구에 종속

돼 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질 낮은 밥·간식을 제공하거나, 유아를 허위로 신고해 정부 보육료만 챙기거나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보육의 질은 보육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직결돼 있는데, 민간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지난 10년간 정부 지원이 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생색내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은 이름만 '공공형'일 뿐 국가 보조금을 이용해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동안 여성운



공공 보육서비스는 이중의 굴레에 고통받는 여성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핵심적이다.

동과 노동자 운동은 보육 시장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가 책임성을 훨씬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충,

자치단체의 시설 직접 운영·보육교사 직공용 등 국가가 책임지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노동계급에겐 사회 변화의 잠재력이 있다

유럽 지배자들이 그리스 시리자 정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났다. “기관들”, 즉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을 운영하는 자들은 선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리스 노동자 계급과 서민들에게 내뿜을 강요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권력은 의회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지배계급(핵심적으로 억만장자와 국가관료)에게 있다.

그러나 그리스의 위기는 노동자들이 잠재력을 갖고 있음도 보여 줬다. 계급 사회를 끝장낼 수 있는 잠재력 말이다.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그들의 국가에 도전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있다.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의존해 이윤을 얻는다. 노동자들은 일할 능력(노동력)을 팔지만 자본가들이 지급하는 대가는 노동자들이 생산한 부(富)의 극히 일부이다. 이것이 칼 마르크스가 말한 “착취”가 뜻하는 바이다. 착취당하는 덕분에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이윤 획득을 끊을 수 있는 독특한 힘이 있는 사회적 위치를 점하게 됐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 맞선 저항과 자본가의 공격에 맞선 노동계급의 저항을 모두 지지한다. 집회·시위 등 직접행동은 저항의 중요한 일부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싸울 자신감을 준다. 그러나 조직 노동자들의 행동은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윤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말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이 3주째 접어들며 앞서 말한 노동자들의 힘을 톡톡히 보여 줬다. 과거로 좀더 거슬러 올라가 1996~97년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 때도 우리는 그 힘을 톡톡히 볼 수 있었다.

자본주의는 마르크스가 활동하던 때와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경쟁 때문에 자본가들은 더 새롭고 더 수익성 좋은 생산 방법을 찾아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압박을 항상 받는다.

변화

이런 변화로 노동계급도 변한 듯하다. 영국에 남아 있던 석탄 광산 두 곳은 이제 폐광이 됐다.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과 서비스 부문에서 일한다.

그러나 그 노동자들도 여전히 자본가들의 이윤 획득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행동은 정부와 그 부자 친구들을 정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정치적 분노가 표출되는 구심점이 됐다.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서울의 운송망을 폐쇄하거나 한 제조업 부문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부문에서 일하든 노동자들의 행동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진정한 개혁을 쟁취하고 지배자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



독재자를 타도하며 노동계급의 힘을 톡톡히 보여 준 2011년 이집트 혁명.

그뿐 아니라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근본적으로 도전할 수도 있다. 몇 년 전 이집트 혁명은 그런 가능성을 보여 줬다. 2011년 초 카이로 타호리르 광장 점거 운동은 혁명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세력관계를 결정적으로 바꿔 줬던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를 몰아낸 것은 방직 공장과 수예조운하 노동자들의 파업이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투쟁은 노동자들이 사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더 큰 질문을 던지며 오랜 고정관념에 도전하게 만든다. 스스로 조직하기 시작하면, 노동자들은 자본가들 없이도 사회를 운영할 힘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부분적으로는 이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관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둘러 파업을 끝내지 못하도록] 스스로 파업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013년 6월 그리스 지배계급이 국영 방송사 ERT를 폐쇄했을 때 노동자들은 방송국을 점거하고 스스로 운영했다. 한 ERT 노동자는 5개월 뒤 이렇게 말했다. “ERT는 이제 투쟁을 지지하는 수단입니다. 파업과 시위를 모두 방송합니다. 정부는 감히 시위 진압 경찰을 보낼 생각을 못 합니다. 노동계급 연대 덕분에입니다.”

투쟁은 노동자들의 관념을 변화시

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예전의 관념을 모두 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시스템을 타도할 생각보다는 개혁하려 애쓰거나, 구제제의 야당 인사가 새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1917년 2월 러시아 혁명은 증오스런 차르를 타도하고 임시정부를 세웠다. 많은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주로 기업가들로 이뤄진 임시정부가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했다.

국가 조직

그러나 기대했던 변화는 너무 더뎠고, 노동자들은 소비에트라는 그들의 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관념도 변했다.

투쟁이 혁명으로 나아가도록 하려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조직돼 있어야 한다.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당이 노동자들의 권력 장악과 노동자 국가 건설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했다. 볼셰비키는 기존 자본주의 국가기구 인수가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흔히 국가는 중립이라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지키는 자본주의 국가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국가를 “전체 부르주아지의 공동 관심사를 다루는 집행위원회일 뿐”이라고 묘사했다.

오늘날에도 이 묘사가 들어맞는다. 자본가들은 정치인들에게 로비해 기업에 득이 되는 정책을 통과시킨다. 의료·철도 민영화나, 부동산업 규제 폐지나, 법인세 감면 따위의 정책을 말이다.

정치인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진정한 권력은 경제를 지배하는 대기업과 은행의 손에 있다. 이들이 무엇을 생산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지를 결정한다. 이것이 현 지배 체제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선출된 정부를 기업들이 ‘지배’한다는 식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다수 정치인과 국가 관료는 대기업 경영진과 배경이 비슷하다. 고위 정치인, 고위 공무원, 은행 임원, 기업 C-레벨(경영진) 사이에는 일종의 회전문이 있어 돌아가며 한 자리씩 차지한다. 그래서 좀더 좌파적인 정부를 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이다.

어떤 성향의 정부가 선출되더라도 지배자들의 부와 권력은 온전히 남는다. 정부가 아주 사소한 개혁이라도 하려 하면 자본가들은 정부를 협박한다. 경영진 보너스가 줄거나 기업 규제가 강화되면 자본가들은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겠다고 협박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면 자본가들은 일자리를 줄이고 폐업을 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좌파 정부들이 결국에는 자본주의 체제를 관리

하고 자본가들의 국가를 유지하는 데서 멈춘 것이다.

진정한 문제는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자본주의의 구조에 있다. 국가 기구는 자본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자본주의는 “자유시장”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대기업들은 항상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확장

국가는 자본가들의 사업을 보호하고 체제 확장에 필요한 의료·교육·운송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지원한다. 오늘날 국가나 국가들의 동맹은 ‘자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경쟁한다. 그들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세금을 낮추거나, 저임금 유지를 위한 규제 완화를 놓고 경쟁한다.

노동자들의 처지가 개선되는 좀더 나은 자본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착취와 경쟁은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이다. 이 본질은 개혁될 수 없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이에 실패하면 망한다.

마르크스는 이런 경쟁 압력 때문에 지배자들이 “축적을 위한 축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본가들은 자신의 경제력을 이용해 체제를 유지하고 체제에 대한 도전 분쇄한다. 그것이 좌파 정부의 도전이든 노동자들의 파업이든 말이다. 자본가들의 국가는 경찰·보안기관·군대·법원 같은 억압 기구를 이용해 저항을 진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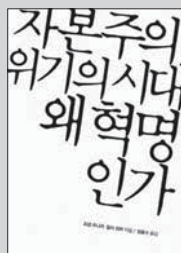
지배자들은 우리가 자본가들은 전능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믿길 바란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사회를 운영할 수 없고 사회주의는 재앙이라고 믿길 바란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빈곤·전쟁·인종차별을 낳는 체제의 운영자들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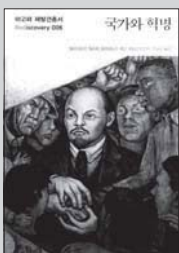
자본가들은 끊임없는 상호 경쟁 때문에 노동자들을 계속 공격해야 하고, 바로 이 때문에 투쟁은 계속 일어난다. 혁명은 앞으로도 계속 분출할 것이다. 진정한 물음은 과연 혁명이 승리할 것인가 아니냐이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을 타도할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을 발휘해 자본가들을 영원히 권좌에서 끌어내리려면 노동자들은 조직해야 한다.

* 이 글은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2461호에 실린 토머스 텐절라-에반스, ‘Who has power in society?’를 번안한 것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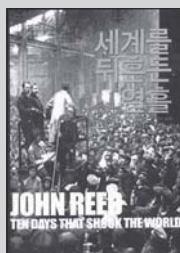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왜 혁명인가
조셉 추나라, 찰리 김버
지음 | 책갈피 |
144쪽 | 5,500원



국가와 혁명
블라디미르 일리치 올리야
노프 레닌 지음 | 아교라 |
200쪽 | 12,000원



21세기의 혁명
크리스 하먼 지음 | 책갈
피 | 176쪽 | 8,000원



세계를 뒤흔든 열흘
존 리드 지음 | 책갈
피 | 464쪽 |
12,000원

철도노조 일에 ‘외부’ 단체는 끼어들지 말아야 하는가?

이정원

얼마 전 철도노조 조합원용 게시판에 ‘서지본에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신임 지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동지가 왜 ‘노동자연대’ 단체가 철도노조 투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그는 노동자연대 활동가들이 철도노조 소속이 아닌데도 서울지방본부 지부장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관하고 특히 급속승진제 잠정 합의 부결을 주장하는 리플렛을 회의석상에서 반포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울지방본부(서지본)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 물음에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은 이렇게 답변했다. “각종 공개된 회의(지부장회의, 대의원대회 등)에 조합원은 물론 연대단위나 타 노동조합이 참관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며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 그리고 더 큰 연대를 조직하고자 노력한다.”

한 조합원도 ‘노동자연대’가 철도 민영화 저지 대책위에 참가해 적극적으로 연대해 온 단체이며 “철도노동조합의 투쟁에 함께 연대하고 있고, 잘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의견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두 글은 모두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하고 중요함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계급의식적이다.

노동자들의 연대 활동은 말과 글과 행동을 통해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투쟁이 승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안한다. 기본적으로는 그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겠지만, 운동의 전망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하므로 때로는 그 투쟁의 방법과 전망 문제를 놓고 논쟁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이때, 특정 노동조합의 외부나 내부나 하는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계급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문주의적·경제주의적 관점이다.

이런 접근은 투쟁을 승리로 이끄

는 데 매우 비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지배자들은 한 노동조합의 투쟁에 단결해 대응하기 때문이다. 한 부문이나 사업장의 투쟁 승리가 다른 부문이나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고무하고, 지배자들의 착취와 억압에 도전하게 만들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외부의 언론, 경찰, 법원, 다른 기업주의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개입하고 나선다. 예컨대, 관세청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추가 연장하고,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이 공개적으로 비난한 2013년 철도 파업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요즘 개별 공공기관과 사기업들에 임금피크제를 강제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따라서 노동계급도 일치 단결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려면 특정 노조의 투쟁은 단지 해당 노동조합만의 문제라고 협소하게 보기보다는 노동계급 전체가 하나라는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

계급의식

종종 ‘외부’ 단체의 ‘부적절한’ 개입을 문제 삼는 것은 의견 표명 행위 자체보다 특정 의견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이런 물음을 던져 볼 수 있다. 첫째 ‘어떤 종류의 의견은 표명할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의견은 표명해선 안 되는가?’ 둘째, 허용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가?

결국, 따지고 보면 연대 단체가 집행부의 방침을 거스를 때 이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 개입’ 운운하는 논리가 등장하는 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투쟁에 대한 연대를 집행부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여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이상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에 따르면, 철도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을 하는 지금, 공공운수노조 집행부가 임금피크제 수용을 전제로 한 노정교섭에 참가해 오히려 투쟁을 약화시키는 것을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노사정위에 한국노총 집행부가 참가한 것을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

철도 게시판에 글을 남긴 지부장은 노동자연대가 철도노조 집행부의 급속승진제 폐지 입단협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이 의견을 여러 지부장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 한 행동이 연대 단체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고, “노조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노동자연대가 주장한 ‘급속승진제 사수’는 철도노조 대의원 대회, 전국지부장회의에서 거듭 결의했던 것으로, 오히려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물론 당시 집행부가 급속승진제 폐지에 합의해 버려 달리 대안이 없다고 여긴 조합원들의 다수가 안타깝게도 급속승진제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급속승진제 폐지 합의를 내놓은 노조 지도부에 반대하는 주장조차 없었다면 가장 투쟁적이고 선진적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좌절감은 더 컸을 것이다. 당시 급속승진제 폐지에 반대하는 조합원은 약 40퍼센트나 됐다.

때로는 특정 노조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된 일이라 해도 그것이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따라서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면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예컨대, 어떤 노조가 이주노동자를 사업장에서 내쫓기로 결정했다면, 설사 그 결정이 민주적 절차를 거쳤을지라도 노동계급 전체의 단결을 해치는 것이므로 그 결정을 비판해야 원칙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중심으로 노동자 투쟁의 승리를 기원하고 이를 돕고자 하는 노동운동 활동가라면, 노동운동 안에서 쓰디쓴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해서는 안 된다. “보편적 기만의 때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혁명적 행위이다.”(조지 오웰)

사회주의자들의

김중환

사회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노동조합 투쟁을 지지하고, 또 그 투쟁에 관여해야 한다고 맨 처음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르크스와 엥겔스였다. 그들은, ‘노동조합은 경제적 이득만을 노릴 뿐 정치 혁명과는 무관하다’는 당대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에 반대해 노동조합 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 이래로 국제 노동계급 운동에서는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개입과 비판을 주고 받는 전통이 이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일각에서는 사회주의 단체의 노동조합 운동 관여를 ‘외부 세력 개입’이라며 탐탁지 않게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입을 빌어 사회주의자들의 개입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그것이 노동운동의 전통이 됐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조합 —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반되는 서로 적대하는 계급을 이룬다.

자본가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통제하며 노동자를 착취한다. 본질이 자본가들을 위한 기구인 국가는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경찰과 군대 등 무장력을 동원해 노동자 투쟁을 탄압한다. 각종 교육기관과 언론은 노동자들을 천대하는 이데올로기를 양산한다.

반면에 노동자들이 의지할 사회적 힘은 자신들이 생산적 노동을 수행한다는 것과 수적으로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일자리 등을 놓고 서로 경쟁하며 분열돼 있다. 게다가 자본주의에서는 임금이 양쪽(노동자와 자본가) 모두 동의한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듯이 보인다.

그 결과, 대체로 노동자들은 착취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유리한(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조건으로 계약을 맺기를 바란다. 노동조합은 이런 목적을 위해 노동자들이 분열을 조금이나마 극복하려고 자발적으로 만드는 조직이다. 마르크스는 이 점을 높이 사 “현재의 생산 체제(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노동조합을 버릴 수 없다”고 썼다. (‘노동조합 — 그 과거, 현재 미래’, 1866년)

노동조합은 각종 문제를 놓고 그야말로 매일매일 사용자와 충돌을 벌인다. 이런 가장 기초적인 노동조합 투쟁조차 자본가와와의 긴장을 자아내고, 평등한 듯이 보였던 계약이 사실은 불평등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종립적인 척했던 국가가 사실은 자본가 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일상적 투쟁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점차 깨닫는다. 그래서 마

르크스는 “노동조합의 [투쟁 성과보다] 더 중요한 점은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임금노동과 자본의 지배를 극복할 주제로 조직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부문주의라는 병

노동조합은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가 분리시킨 분열을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 기업들은 생산 조직 방식이 저마다 다르고 게다가 끊임없이 생산 과정을 혁신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 과정은 불균등하고, 선진 부문과 후진 부문의 위치도 수시로 바뀐다. 이런 불균등성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도 반영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전체 계급투쟁을 고려하기보다는 자기 사업장이나 부문에 국한된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이를 부문주의라고 한다. 레닌의 표현을 빌리면, 부문주의는 “노동운동이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순수한 경제적 대립이라는 좁은 영역에만 국한되고 정치적 성격을 배제한다.”(‘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항의’, 1899년)

그러나 노동조합 투쟁, 특히 효과적 파업에서는 경제와 정치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십상이다. 예컨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맞선 투쟁은 노동조건을 두고 벌어진다는 점에서 경제 투쟁인 동시에 그 대상이 정부이고 전(全) 계급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 투쟁이기도 하다. 2013년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파업도 마찬가지였다.

부문적 요구를 위한 투쟁도 종종 정치 투쟁의 요소를 내포한다. 종종 자본가가 노동자들의 정당성과 투지를 꺾으려고 온갖 이데올로기를 동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초래하므로 결국 노동자들에게 손해라는 당대 주장을 반박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없다’는 주장을 근본적으로 반박하려면 혁명적 이론에 근거한 사회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레닌은 노동조합의 부문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계급투쟁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노동운동과 혁명운동(이 둘은 우리[혁명가들]에게 같은 것이다)은 크게 후퇴하고 타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조합과 정치조직의 관계

‘하지만 노동조합은 자체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의견을 개진하면 노조의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조합원의 단결을 해치는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응당 제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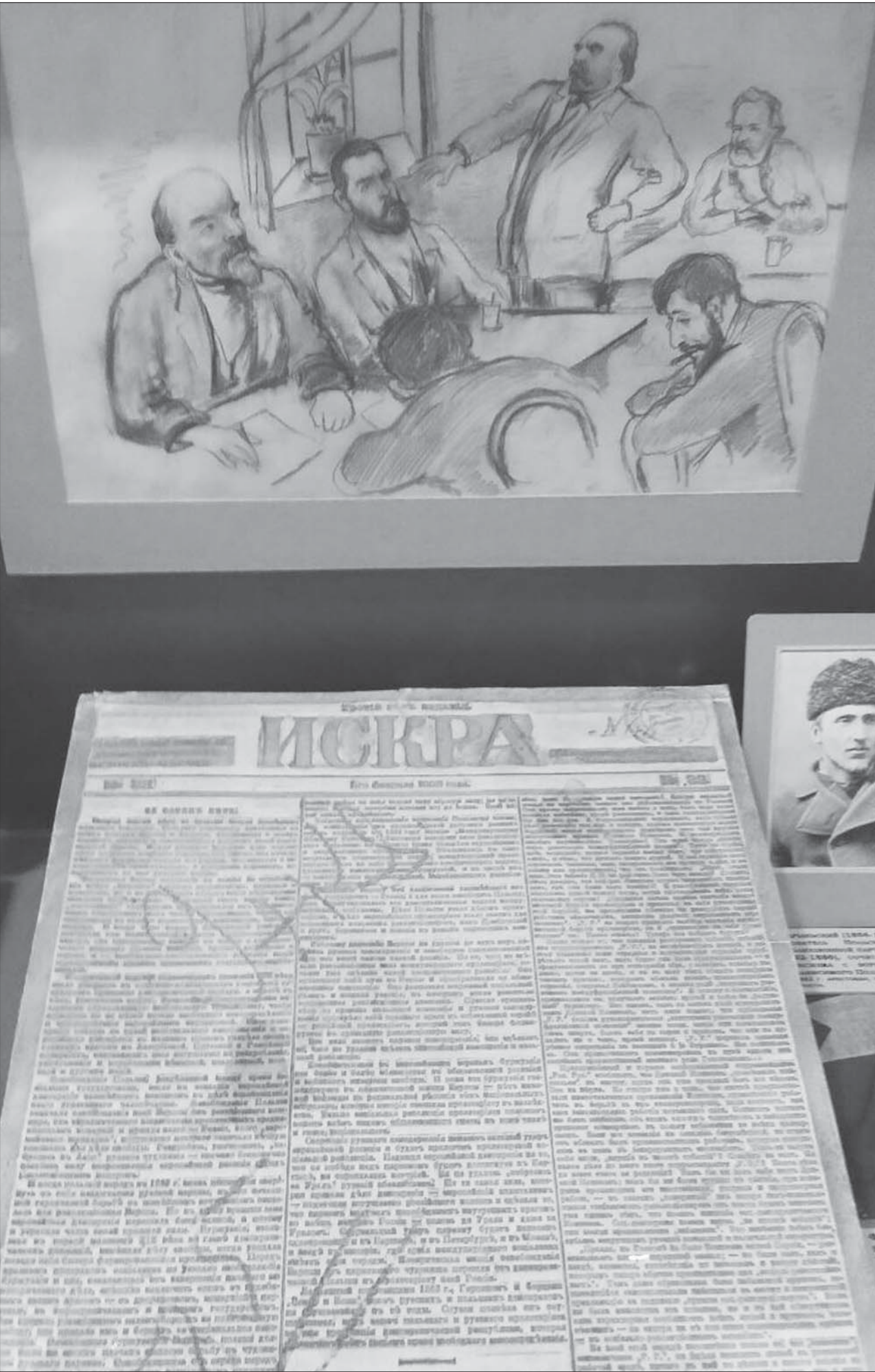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의 성격과 목적이 혁명적 정치조직



‘외부 개입’ 논리는 투쟁을 강화하는 데 해롭다 2013년 철도 파업 파업 당시 파업 지지활동에 나선 ‘노동자연대’

사진:이원진

노동조합 개입·비판은 지당한 국제적 전통



레닌은 노동자 운동이 부문주의에 갇히지 않으려면 혁명가들이 전국적 정치 신문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역사 박물관에 전시된 신문 〈이스크라〉. 〈이스크라〉는 1900년에 레닌이 창간한 신문으로 ‘불꽃’이라는 뜻이다.

(정당)과 완전히 다름을 이해한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조합은 정치색이 다른 노동자, 무당파 노동자, 무신론자, 종교 신자를 모두 아우르지만, 당은 분명한 강령을 바탕으로 정견이 같은 사람들을 결속한다.”(‘코민테른에 제출한 트로츠키의 공동전선 테제’, 1922년)

같은 이유로 1908년 제2인터내셔널 슈투트가르트 대회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원들에게 ‘노조원의 사회주의 정당 자동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애초에 마르크스가 노동조합을 중시한 이유는 그것이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당은 외부에서 노동조합을 종속시킬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고 또 그럴 수도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혁명적 조직과(성격과 목적이) 다르다는 바로 그 이유로 혁명 조직은 개입을 해야만 한다. 항상 노동조합 안에는 전투적이며 사회주의적 의식에 가까운 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보수적이고 우파적 사상을 수용하는 노동자도 있다. 대다수는 중간에서 동요한다.

이런 불균등성을 극복하고 투쟁을 더 전진시키려면 전투적이거나 좌파적인 노동자들이 조직돼 있어야 한다. 특히, 지난 투쟁의 교훈을 잘 이끌어내고 일반화하려면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주의 조직의 노동조합 운동 참여와 개입은 투쟁에 순기능을 할 수 있다.

관건은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트로츠키는 이렇게 정리했다. “당은 노동조합 안에서 당원[과 그 지지자들]이 활동하고 당의 견해를 실행에 옮기는 형태로만 영향력을 획득할 뿐이다. … 당은 위에서 말한 방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 안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노동조합 안에서 공산주의자의 활동이 당의 원칙에 완전히 일치하고 언제나 당의 통제 아래 실행될 때만 당은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강조는 원문)

레닌도 노동조합원들에게 정당 가입을 일괄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그것을 ‘노동조합은 사회주의 정

사회주의자들은 노동계급 전체의 단결과 이익을 위해 공공연히 이견을 표명해야 한다. 부문적 시야에 갇혀 ‘외부 단체 개입’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지배자들의 힘만 키우는 구실을 한다.

당과 가까워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혼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노동조합 중립성에 관해’, 1908년):

“우리는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누군가 조장한 견해 차이를 놓고 씨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필요하다면 찢를 지지하는 노동자와도 함께 파업을 방어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과 자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원뿐 아니라 그 밖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우리의 이견을 표명할 것이다.”

지배자들은 일상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분열을 조장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현 사회질서 안에서 협소한 활동에 머무르고 사회주의 운동과 어떤 접촉도 갖지 않기를 바란다.”(레닌, ‘노동조합 중립성에 관해’)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계급 전체의 단결과 이익을 위해 공공연히 이견을 표명해야 한다. 부문적 시야에 갇혀 ‘외부’ 단체 개입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지배자들의 힘만 키우는 구실을 한다. 즉, “부르주아지의 바람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장하는 것이다.”(레닌, ‘노동조합 중립성에 관해’)

노조 관료와 민주주의

노동조합이 발전하고 안착될수록 사용자와의 협상을 전담하는 노조 관료층이 형성·발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노조 관료층은 특수한 사회집단으로서 투쟁의 확산과 전진보다는 기구 자체의 존속을 더 중시하며 보수적 성향을 보이기 쉽다.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중재자라는 자신의 존재 근거가 바로 노동조합 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투적 활동가가 노조 집행권을 갖게 됐을 때 우경적인 노조 지도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 그래서 ‘현장파도 지도부로 가면 국민파 된다’는 자조적 불만이 많다.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아합에 합의해 준 것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거스른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노조 관료가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집행부의 공무원연금 삭감 방조도 마찬가지였다.

노조 지도자들의 관료주의를 극복

하려면 현장조합원들의 투지와 자신감이 커야 한다. 사회주의 조직은 여기서도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충분히 높은 경우, 그들은 보수적 지도자들의 횡방이나 배신을 넘어 투쟁을 전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다. 노조 관료들에게서 독립적인 현장 조합원 운동이 그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제1차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클라이드 노동자 위원회이다. 그들은 모든 주요 공장에 현장 노동자 대표를 두었고 노조 지도자들의 반대를 거슬러 대규모 파업을 이끌었다. 클라이드 노동자 위원회는 자신들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는 지도부가 노동자들을 올바르게 대표하는 한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독립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장 조합원 운동은 계급투쟁 수위가 충분히 높지 않으면 일어나거나 유지될 수 없다. 오늘날 한국 노동운동은 침체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장 조합원 운동이 일어날 만큼 고양기인 것도 아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노조 지도자들에게 환상을 갖지 않으면서도 지도자들이 투쟁과 파업 지침을 내리도록 아래로부터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노동자연대가 노동조합 운동에 개입하는 대체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물론 소수 노동자들일지라도 지도자의 소심함을 거슬러 투쟁할 태세가 돼 있는 듯하면 과감하게 그러자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노조 내 전투적 활동가들과 함께 노조 관료에게 압력을 가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은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Marx, ‘Trade Unions: Their Past, Present, and Future’, 1866.

도니 글록스타인, ‘민주주의 – 사실과 물신 숭배’, 《마르크스21》 14호(2014년 여름).

레닌,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합의’, 1899년.

레닌, ‘노동조합 중립성’, 1908년.

트로츠키, ‘코민테른에 제출한 트로츠키의 공동전선 테제’, 《마르크스21》 8호(2010년 겨울).



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전쟁 선포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가 “노동개혁”의 핵심

박설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 야합을 명분 삼아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공격에 착수했다.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은 즉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9월 16일 새누리당은 법 개약안들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수많은 청년과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중 90퍼센트를 차지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홍보해 왔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공공부문-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더러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 야합안과 새누리당의 입법안은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 범위를 더 늘리고,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평생 비정규직으로 전전긍긍하게 만들 내용으로 채워졌다. 심지어 정부가 ‘당근책’으로 제시했던 실업급여도 개악됐다. (자세한 내용은 3면을 보시오.)

더구나 정규직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등 조건이 나빠지면, 더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건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위험이 크다.

정부는 심화되는 경제 위기에 대응해 어떻게든 노동자들을 쥐어짜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이를 위해 노동시장 전반의 조건을 끌어내리기 위한 구조적 기틀을 전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노사정위 합의안과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은 4월 노사정위 논의 당시 정부측의 요구안보다 더 후퇴했다는 점에서도 고약하다. 예를 들어, 노사정위는 쉬운 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추진에 더해, 경총이 그토록 요구했던 법제화의 길까지 열어줬다. 쉬운 해고를 포함해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조직·취약노조 사업장에서 해고를 쉽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법 개악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법제화 가능성은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악에도 적용될 수 있다. 노사정위가 ‘제도 개선’의 내용으로 제시한 “근로계약 전반”에는 해고뿐 아니라 성과형 임금, 승진, 배치전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 야합안에 온근슬쩍 개악 요소들을 추가해 법안을 발의했다. 제조업 일부 업종에 대한 파견 확대, 실업급여 삭감은 대표적 사례다. (관련 기사는 3면을 보시오)

새누리당은 현행법을 뜯어고쳐 앞으로 최소 8년간은 노동시간을 주 60시간으로 하는 것(노사정위안, 현행 최장 52시간)도 모자라, 휴일근로 수당을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법원은 그동안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해 2백 퍼센트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 왔다. 현재 관련 재판이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바로 이 판결이 나기 전에 법을 개악해 기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

통상임금의 경우에는 국회 논란을 피해 정부가 일방으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한다” 하는 문구를 법조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체 사업장의 3분의 1이 정기상여금 지급에 재직자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 사업장들에서 통상임금 확대가 제약을 당하게 생겼다.

요컨대, 이번 노사정위 야합안과 새누리당의 법안은 한 마디로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임금을 낮추고, 비정규직을 더 늘릴 수 있게 한다.

IMF 경제 위기와 맞물려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지난 십수년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듯이, 이번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도 노동자들의 현재와 미래의 처지를 더한층 나쁘게 만들 것이 뻔한 “대(對) 노동계급 전쟁 선포”다.

민주노총은 사활을 걸고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해 박근혜의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쉬운 해고

- 부도·파산 위기 아니더라도, “일반해고”란 이름으로 일상적 해고
- “자성과자”로 낙인 찍어 전환배치, 임금 삭감 뒤 해고까지!
[추석 전후 가이드라인 발표 → 향후 법제화 가능성]



임금 삭감

- 고령자 임금 삭감(임금피크제)
- 성과 경쟁 부추겨 임금 삭감하고 단결 저해(직무-성과급제)
[추석 전후 가이드라인 발표(취업규칙 가이드라인) → 향후 법제화 가능성]



더 많은 비정규직

- 정규직화는 기대 말고 비정규직으로 살라
- 기간제 기간 2년 → 4년 연장, 고령자·제조업 일부 파견 허용
[11월 국회에서 법 개악(기간제법, 파견법)]



사장 맘대로 취업규칙 개악

- 미조직·비정규직·취약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 맘대로 취업규칙 개악
- 노조 있는 사업장의 단협에도 정부가 개입해 시정명령
[추석 전후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발표]



장시간 노동 유지

- 최소 8년간 주 60시간 근무 허용, 중복활동 없애 휴일근로 수당 축소
- 수당 없이 사용자 맘대로 노동시간 줄였다 늘렸다(탄력근무제 확대 등)
[11월 국회에서 법 개악(근로기준법)]



통상임금 범위 축소

- 전체 사업장 3분의 1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재직요건 규정)
- 주택수당, 체력단련비 등 현재 받고 있는 통상임금 항목도 제외될 수 있음
[11월 국회에서 법 개악(근로기준법) → 직후 통상임금 제외항목 시행령 발표]



마르크스주의 학자 폴 블랙레지 초청 강연회

일시 10월 14일(수), 15일(목) ※ 장소와 구체적 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문의** 02-2271-2395

연설 주제

- ▶ 마르크스주의로 윤리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역사 이론으로서의 역사 유물론
- ▶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 그 열망과 한계, 그리고 대안 ▶ 왜 노동자들에게 세계를 변혁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일까?

연사 소개

폴 블랙레지는 영국 리즈 베ckett 대학교(Leeds Beckett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이다. 그가 쓴 마르크스주의 역사 이론, 윤리, 신좌파에 관한 책들은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됐다. 학술 행사뿐 아니라 영국 말시즘 등에서 대중 강연과 패널 토론을 해마다 진행할 만큼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대중화하고 현실 운동에 접목시키는 데 관심이 많다.

